

省谷論叢

第27輯 3卷

社會·新聞·法學

1996

財團
法人 省谷學術文化財團

이 논문은 1994년도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

한국에서의 민족국가 형성 및 전개의 동학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연구책임자: **임 현 진** (서울대 교수, 사회학)
공동연구원: **공 유 식** (아주대 교수, 사회학)
김 병 국 (고려대 교수, 정치외교학)
설 동 훈 (인천교대 강사, 사회학)



1995년 12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요약

한국에서의 민족국가 형성 및 전개의 동학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임현진 · 공유식 · 김병국 · 설동훈

탈산업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통신위성 기술에 힘입어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전 세계가 동일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편, 똑같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흩어진 인종·혈연·문화를 결집시켜 민족간의 전쟁까지 불사하는 전근대적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민족과 민족국가 형성의 문제는 18세기 중반의 서유럽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한 민족이 처한 역사적·정치적·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주권·다원주의·자유·평등 등의 고전적 이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민족형성·민족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보편적 시민사회적 민족주의 이념들은 반봉건·반제국주의 등 한층 더 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던 저항 민족주의와 첨예한 인종간의 갈등으로 인해 문화적 동일체감을 특히 강조하고 경제발전이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대부분의 신생국들에서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반대로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의 독립운동에서는 서유럽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이념들이 강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정 민족의 형성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세계사적 보편성과 그 민족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각이 요청된다. 한국사회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민족의 형성, 민족국가의 건설, 민족주의 운동의 궤적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사회에 투영해 보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유럽의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편파적 입장을 배격하고,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서유럽에서 태동한 근대적 민족형성 과정과 민족주의의 성격을 살펴보았고, 이것이 제3세계를 포함하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자리잡았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 한국 민족형성의 긴 역사적 궤적을 찾기보다는 반제·반봉건이 주축이 된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동아시아 정치·경제 질서를 살펴보고, 개항에서부터 행방과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을 평가하였다. 셋째, 한국처럼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베트남·예멘의 분단과 재통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아직 민족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끝으로, 앞장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민족관·민족주의의 문제점을 검토·정리하고 통일 후 민족재결집의 시기에 대두될 새로운 민족형성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진단하였다.

ABSTRACT

A Comparative Historical Study of the Dynamics of Nation Building and State Formation

Hyun-Chin Lim, Yooshik Gong, Byung-Kook Kim, and Dong-Hoon Seol

Post-Industrial Societies are witnessing a revolution i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as a result the world is becoming more homogeneous in life-style and outlook. Yet the same technology is employed in parts of the world to destroy and build from its debris a pre-modern community, and to wedge a war against neighboring ethnic groups. The issues of nation and nation-state have not disappeared with the end of the 18th century, but in fact they are assuming new historical/theoretical meanings across time and space. Although many critics of nationalism point out the danger inherent in nationalism as a tendency to degenerate into an ideology that represses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cal notions of citizenship, pluralism, liberty and equality. It needs to be recognized that for the countries of the Third World (who possessed the urgent task of anti-feudalist, anti-imperialist struggle), the universal, civic concepts of classical nationalism were secondary to the need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integration required to overcome the ethnic fragmentation. Nationalism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was destined to develop along the path that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English-speaking new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New Zealand, and Australia. To understand the nature of a particular nationalist movemen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universal from the particular.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lace Korean Nationalis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distinguishing it from those of European nations, but at the same time, not falling into a "Korea-is-unique" thesis. What is required is to put the universal and particular in one analytic framework. With such an objective, Chapter 2 reviews the early formation of nation and nationalism in Western Europe; Chapter 3 analyzes the political economic order of East Asia at the turn of the century with the objective of understanding Korean nationalism which had as its goal a struggle against feudalism and imperialism, as well as placing modern Korean Nationalism (which emerged with the opening of Korea at the turn of the century and underwent a profound transformation through the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Chapter 4 studies the historical cases of unification of the nations that were divided into two parts due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Germany, Viet Nam, Yemen), and in doing so, tries to bring ou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wo Koreas which have yet to complete the modern project; Chapter 5, based on the prior analyses, attempts to theorize on the peculiarities of Korean nationalism and identify major issues of nation re-building which two Koreas would face after unification.

한국에서의 민족국가 형성 및 전개의 동학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연구책임자: 임 현 진 (서울대 교수, 사회학)
공동연구원: 공 유 식 (아주대 교수, 사회학)
김 병 국 (고려대 교수, 정치외교학)
연구 조 원: 설 동 훈 (인천교대 강사, 사회학)

《 목 차 》

제 1 장 문제 제기	1
1. 민족, 민족국가, 민족주의: 개념적 혼란	1
2.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2
3. 한국사회에의 적용과 한계	5
제 2 장 비교사적 지평에서 본 민족과 국가의 형성	7
1. 근대의 혁명: 서유럽의 민족과 국가형성	7
2. 시기와 수순: 후발 국가의 경험	10
3. 탈(脫)근대 시대의 근대적 현상: 제3세계의 딜레마	14
제 3 장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국가 건설의 좌절	19
1. 제국주의의 충격	19
2. 19세기 후반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경제체제	20
3. ‘한족’에서 ‘한민족’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항일투쟁	22
4. 민족국가 건설의 좌절과 분단	27
제 4 장 독일, 베트남 및 예멘의 분단과 통일과정 비교분석	29
1. 분단국가 체제의 성립과정	29
2. 분단국가 체제의 지속과 극복	32
3. 분단 극복의 과정	35
4. 한반도 통일논의	41
제 5 장 결론: 결손국가론의 정립	44
1. 통일 민족국가 건설의 과제	44
2. 가족주의적 민족관념	46
3. 가족중심적 민족관념을 넘어서	49
참고문헌	51

※ 이 논문은 1994년도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

제 1 장 문제 제기

1. 민족, 민족국가, 민족주의: 개념적 혼란

민족형성과 국가건설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국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족이 무엇인가, 국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뚜렷한 합의는 없는 것 같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국가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제쳐 두고, 민족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민족을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근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대립된다.¹⁾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과 국가가 동시에 개재된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서 논의는 갈 길을 잃게 된다.

“민족이란 공통의 언어·영토·경제생활과 공통의 문화 속에 표출되어 있는 민족적·심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 공동체”라고 한 스탈린(Stalin, 1942)의 포괄적인 정의는 민족과 국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을 구성하는 주관적·객관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 개념의 일반적 적용성은 높지만 개념의 분석적 유용성은 거의 없다. 물론 민족을 공통의 언어·인종·종교 등 관찰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만 정의하면 논란의 여지는 많이 축소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개인의 소속감·동일체감(identity)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역사적 공통성이라는 민족의식의 핵심적 요소가 빠지게 된다. 베버(Weber, 1948: 171~177)가 지적했듯이 민족이란 특정한 역사적 인식에 의거한 일체감(solidarity)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통의 조상에 대한 신화로 통합된 공동체로서 문화적 의무감(a sense of cultural mission)을 공유한다.²⁾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체감·의무감 등을 객관적 지표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성원 개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잡아 성원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다른 집단에 성원과 구분시켜 주는 심리적 밀착감이라고 추상적인 정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같은 민족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밀착감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공통의 언어·문화·생활양식 등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근거는 역시 같은 인종, 같은 혈연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일 수밖에 없다. 민족의 근대형성설을 주장하는 입장은 혈연집단에 근거한 민족관을 부인해 왔지만,³⁾ 같은 민족이라면 무엇보다도 한 집단의 성원이 같은 조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민족이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혈연적 관계 때문에 개개인의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집단이며, 이런 의미에서 민족이란 커다란 규모의 확대가족으로 볼 수 있다(Connor, 1994: 80; van den Berghe, 1978). 따라서 민족이란

1) 민족을 초역사적 실체로 보는 입장에서는 민족이 근대에 들어 비로소 형성되었다는 관점을 서구의 경험에만 의존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사적 시야에서 민족형성의 이론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여기에서 특정한 역사적 인식이라 함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일 필요는 없다. 대체로 민족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신화를 동반하기 마련이고, 그 신화의 역사적 사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느껴지고 인식되어진 역사 즉,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동일민족으로의 역사적 인식이 중요하다(Connor, 1994: 79~80).

3) 맥나일(McNeil, 1990)은 최근의 연구에서 유럽에 있어서도 1750~1920년의 시기만이 인종적 동질성에 근거한 민족주의를 배격한 유일한 기간이었다고 주장한다.

근대에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문화와 인종의 흥망과 성쇠를 통해 형성된 것이며(Armstrong, 1982), 민족 형성에 있어서 유럽과 제3세계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는 것은 크게 과장된 것이며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의 근원은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민족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가라는 그릇 안에 담으려 했던 서유럽의 특수한 근대적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시켰기 때문이다. 민족을 구성하는 객관적·주관적 요소들은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라는 ‘경계선을 가진 권력용기’(權力容器, bordered power-container) 안에 잠시 담아 민족국가라는 이름을 붙인 근대성의 산물일 뿐이다(Giddens, 1985: 119~121). 200여 개도 안되는 국가가 수천에 이르는 민족을 포괄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은 일치하기가 어려우며, 이 양자가 일치하는 단일 민족국가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아이슬란드·일본·노르웨이 및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폴란드 등에 불과하다. 엄밀히 말해, 대부분의 민족국가는 다 민족국가(multi-nation states)이며, 서로 다른 권력용기에 담겨져 있어서 민족이 분리되어 있거나 그나마 담겨질 용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민을 하거나 망명생활을 해야 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 민족도 존재하는 것이다(Connor, 1994: 75~77).

따라서 민족에 대한 견해는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민족 또는 민족형성을 근대사회의 성립과 연결 지우는 것은 유럽 중심적인 제한적이고도 편파된 시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족은 언어와 문화, 혈연이라는 자연적·객관적 성격에 민족으로서의 동질의식이라는 주관적 성격이 더해진 것이라는 일반적 정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단지 언어·문화·종교·혈연 등의 자연적·객관적 요소가 반드시 민족적 동질의식을 보장해 주는 충분조건적 요소가 아니며 필요조건으로서 그 민족이 처한 역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민족 그 자체는 초역사적인 실체로 보아야 하며, 다만 특수한 역사적 상황하에서 그와 같은 자연적·객관적 요소들을 넘어서서 민족적 동질의식을 갖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서유럽의 독특한 역사에서 관찰한 바 있다. 서유럽에 있어서 민족으로서의 주관적 동질의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발흥과 함께 이루어진 국민주권사상의 확립이며, 이를 통해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국민적 동질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서유럽만의 특수한 역사적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본주의가 확산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대다수 후발 국가들은 반봉건의 문제와 반제국주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난제를 안고 있었다.

2.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스미쓰는(Smith, 1989: 349~356) 서유럽의 18세기 이전의 서유럽의 민족을 전근대 민족공동체(ethnie)로 규정하고, 이를 수평적·귀족적(lateral and aristocratic) 공동체와 수직적·민중적(vertical and demotic) 공동체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광범위한 영토에 퍼져 있지만 민중적 기반이 취약했고, 후자는 영토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탄탄한 민중적 기반이 있었으며, 이미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의 동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근대적 민족은 관료제적 국가를 통해 하층 계급을 통합시킴으로써 형성할 수 있었고, 후자는 적대적인 국가와 민족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종교지도자에

반기를 든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근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형식은 달랐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시민권의 확립에 있으며, 시민권의 제도화 여부가 18세기 이후 민족국가와 그 이전의 인종적·영토적으로 구획된 민족 공동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⁴⁾ 따라서 근대국가는 앤더슨(Anderson, 1991: 36~46)이 말한 바대로, 날조된 것은 아니지만, 엘리트가 만들어 낸 정치적 가공물(artifact)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이다. 다시 말해서, 서유럽의 독특한 근대 민족형성, 근대 민족국가 형성은 시민권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전통적 민족 개념을 넘어서는 정치적 민족주의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첫째, 서유럽의 어떠한 역사적 조건이 근대민족 및 민족국가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고, 둘째, 누가 이러한 운동을 주도했으며, 셋째,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이 동원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문화론적 설명을 시도한 케두리(Kedourie, 1993)는 18세기 서유럽인들이 정치가 종교를 대신하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칸트(Immanuel Kant)의 관념론에 힘입어 자신이 속한 자연 공동체(곧 민족)의 독특한 문화에 따라 독립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여기에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특정 계급에 국한되었던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의 권력으로 배제되어 있으나 권력을 갈망하던 중간계급의 참여가 확산됨으로써 근대민족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스미쓰(Smith, 1981: 99~104)도 새로운 형태의 민족관·민족주의가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시민사회적 국가간의 극한적 갈등을 겪던 18세기의 산물이라고 간주한다. 즉, 민족주의 이념이 양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케두리와 스미쓰가 민족형성 또는 민족주의의 이념적·문화적 요소를 강조한 반면, 겔너(Gellner, 1964: 158~169)는 산업화와 대중교육이 확산과 같은 근대사회의 구조적 특성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요구했으며, 이것이 근대 민족국가와 민족주의를 생성시켰다고 주장한다. 왜 이러한 변화가 유럽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역사적인 변수를 동원하여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한 사람으로는 톨리(Tilly, 1975: 632~638)가 가장 선각자이다. 톨리는 유럽의 국가들이 일반적 기독교국에서 근대적 민족국가로 변화하게 된 역사적 원인으로 유럽의 지정학적 특성, 봉건제 하에서의 영주와 농노의 특수한 관계, 그리고 국가간의 끊임없는 전쟁을 지적한다. 특히 전쟁과 이에 따른 국가간의 조약들에 의거 새로운 형태의 국가, 즉 근대 민족국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따라서 이들 새로운 형태의 국가들은 오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전근대 민족국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누가, 어떤 세력이 유럽의 근대 민족국가 형성 또는 민족주의에 주도적인 역할

4) 스미쓰는 민족을 지칭함에 있어 에쓰니(ethnie)와 네이션(nation)을 모두 사용하는데, 전자는 전 근대민족을 말하며 후자는 근대민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대와 전근대를 구분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시민권의 유무 여부이다. 따라서 에쓰니는 민족의 객관적 요소, 즉 언어·문화·영토 등이 강조된 것이며, 네이션은 이러한 요소에 시민권 확립이라는 정치적 요소가 가미되어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번역이 없지만 에쓰니는 ‘족’(族)에 가깝고, 네이션은 ‘시민권이 확립된 족’(civic ethnies)으로서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민족(民族)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유럽의 경우 여러 에쓰니가 각기 가지고 있는 족의 특성을 넘어서서 네이션을 형성함으로써 근대민족으로 탈바꿈하였다. 비슷한 논리로 이를 구민족과 신민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Seton-Watson, 1977: 6~10).

을 했는가)의 문제이다. 앞서 앤더슨(Anderson, 1991)이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이 엘리트가 만들어 낸 정치적 가공물이라고 한 것처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근대민족과 민족주의가 정치 엘리트들이 혁명과 민주화의 시기에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경쟁과 조작을 통해 발명해 낸(invented)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Hobsbawm, 1990; Brass, 1991). 계급이라는 변수에 중점을 두어 민족주의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을 시도한 나린(Narin, 1977)은 제국주의적 위협과 경제적 낙후 등 내외적 압력을 받고 있던 후발국가들에서 민족주의는 철저히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반대중을 조직화하고 근대화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특히 중간계급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고,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민족주의는 계급을 초월하는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음을 관찰하였다. 이렇게 볼 때 초기의 민족주의 운동이 유럽적인 것일지라도 이제 민족주의는 전지구적 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대중들의 동조를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 산업화가 낳은 인쇄술의 발달, 통신수단의 발달 등에 기인한 것이라면(Deutsch, 1966; Anderson, 1991), 시각의 차이는 있어도 민족주의가 근대적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⁵⁾

그러나 민족주의는 시기와 지역을 달리하면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근대적 민족주의의 시발점이라고 간주되는 유럽에서조차 민족주의의 유형은 단일하지 않다. 비록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유럽의 이데올로기를 연구한 한스콘(Kohn, 1967)은 서유럽(영국·미국·프랑스)의 자발적(voluntaristic) 민족주의와 중부 및 동부유럽의 유기적(organic)·권위주의적 민족주의로 구분한다. 전자는 중간계급의 참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반면, 후자는 중간계급의 역할이 빠진 채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도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동유럽의 민족주의는 전근대 민족의 속성, 즉 언어·인종·문화 등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소련의 붕괴 이후 동유럽에서 문화적·인종적·언어적 경계선에 따라 독립국가가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Connor, 1994: 201~202).

앞서 언급한대로 탈식민지 신생국의 민족주의는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서유럽의 시민사회적(civic) 요소와 동유럽의 문화인종적(ethnic) 요소에 더하여 근대화·산업화라는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민족주의와 근대국가의 형성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적 요소라 함은 시민권에 대한 집합적 요구이고, 문화인종적 요소는 언어·종족·혈연·종교적 요소가 강조된 일체감을 말한다. 이들은 서로 보완적으로 때로는 경쟁적으로 민족주의의 성격과 방향에 영향을 준다. 시민사회적 요구와 문화인종적 요구가 상충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식민지 정책에 대항하고 낙후된 경제를 끌어올리는 등의 경제적 슬로건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물질적 성과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생 독립국의 의도는 종속이론이나 세계체제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평등한

5) 민족이 근대적인 산물이라고 해서 서구의 경험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근대적 사회 변동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공동체설과 경제공동체설은 신생국가의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 문화주의로 부르기도 하는 문화민족주의는 민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민족문화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며, 스탈린으로 대표되는 경제공동체설은 시장 확대, 교통의 발전을 통해 봉건 사회의 지역적 분산성을 극복하여 탄생한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결과로써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민족의 발생이 무엇보다도 경제생활의 공통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분업체제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들은 근대적 민족형성, 민족 국가 형성에 심각한 딜레마를 겪어야 했다.

3. 한국사회에의 적용과 한계

마치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발전 경로를 우리 사회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서구와 다른 역사적 전통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 서구적 민족 개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구의 경험을 무시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비록 서구적이기는 하나 국민주권·자유·평등과 같은 민족 개념이 가지는 보편적 성격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 즉 민족을 초역사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근대의 산물(서구적 산물 또는 서구의 영향의 결과)로 파악하여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한국 민족의 형성 논의에 있어서도 반복되고 있다(노태돈, 1991; 이영호, 1989).

먼저 민족을 초역사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B. C. 10세기 무렵이나 예(濊)·맥(貊)·한(韓)족의 등장과 함께 한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와 통일신라(統一新羅) 시기를 한민족의 확립기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또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에서 근대 이전의 우리 민족이 서양의 그것에 비해 응집력, 즉 민족적 동일체감이 강했다는 점에서 전근대 민족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존재한다(신용하, 1984; 노태돈, 1991, 1992). 이와 달리 민족을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형성된 근대적 산물로 보는 견해는 다른 후발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세에 대한 저항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또 다시 돌로 나뉜다. 이 견해에서 나타나는 대립은 조선 후기의 내재적 발전을 평가하는 시각 차이에 기반하는 것인데, 먼저 제국주의의 조선 침탈과 그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는 입장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내재적인 사회변혁, 즉 자본주의화를 이룰 만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변혁의 주체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민족형성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제국주의의 침탈 이후에 그에 대한 저항을 통해 민족을 의식하고 민족으로서 행동하게 됨으로써 민족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외인론적 민족형성을 주장하는 입장에 비해 내인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민족의 형성은 조선 후기에 꾸준한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러한 성립 과정에서 외세의 침략에 의해 일정 정도 제약되기도 하였으나, 외세에 대응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⁶⁾

우리가 흔히 민족적 동일체감을 이미 오래 전에 구축한 단일 민족임을 외쳐 왔듯이,

6) 두 견해의 차이는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김용섭, 1970)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영훈, 1985)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양 입장은 조선 후기 모순이 토지제도에 있는지(전자) 아니면 조세제도에 있는지(후자)에 대해 차이를 드러낸다. 전자의 입장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의 발생이 있었으며,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억제,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근대 민족운동에 있어 토지문제의 해결을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함과 동시에 그것을 민족운동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내인론과 외인론간의 논쟁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조선 후기의 내재적 발전에 대한 평가, 각 계급의 민족형성 및 민족문제에 대한 대응과 역할을 문제, 민족형성과 사회구성의 관련성의 문제 등이다.

민족을 초역사적인 실체로 인정하게 국수적 민족주의·민족관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⁷⁾ 또한 외세에 대한 저항을 통해 한국민족의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저항 민족주의의 견해가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중세적 지배체제 및 신분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위정척사(衛正斥邪) 논리가 민족주의로 설명되며, 동양적 전제군주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적·기술적인 면에서만 근대문명을 수용하려고 한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이나 심지어는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려는 복벽주의운동(復辟主義運動)이 외세에 저항성을 보였다는 이유 하나로 민족주의로 간주되기도 한다(송건호·강만길, 1982). 따라서 외세에 대한 저항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근대 민족형성에 있어 본질적인 국민주권의 확립 등의 사상이 간과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제국주의의 통제 또는 위협 하에 있었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반봉건·반제국주의 등이 민족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를 기초로 민족적 동일성을 형성하려 했다는 것이다.⁸⁾ 더욱이 제국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가가 된 신생국의 경우에는 시민권의 확립, 즉 민주화·근대화 등이 민족주의 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것을 보면, 민족형성 또는 민족적 동일체감의 형성 요인들은 시기에 따라, 한 민족이 처한 역사적·정치적·지리적 위치에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탈산업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위성 기술에 힘입어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전세계가 동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지구화의 시대에서 민족적 동일체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똑같은 기술적 수단으로 흩어진 인종·혈연·문화를 결집시켜(Richmond, 1984: 5~16), 민족간의 전쟁까지 불사하는 세기 전 민족주의의 열풍이 다시 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민족과 민족국가 형성의 문제는 18세기 중반의 서유럽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권·다원주의·자유·평등 등의 고전적 이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민족형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⁹⁾ 이러한 고전적 이념들은 반봉건·반제국주의 등 보다 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던 저항 민족주의와 참여한 인종간의 갈등으로 인해 문화적 동일체감을 특히 강조하고 경제발전이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대부분의 신생국들에서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반대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의 독립운동에서는 시민사회적 이념이 서유럽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정 민족의 형성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세계사적 보편성과 그 민족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각이 요청된다. 한국사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7) 파시즘, 나치즘, 북한의 주체사상, 유신체제에서 나타났던 민족주의는 대체로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 이해에 대한 비판은 임지현(1994)을 참조.

8) 이러한 의미에서 저항 민족주의적 시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저항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재에 있어서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에 대한 침탈과 그것에 대한 저항이 존재했고 그것에 대한 이론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과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야 한다. 평가 기준은 당시의 이중적인 과제, 즉 반제·반봉건의 과제의 수행 여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9) 민족주의 이념이라고 해서 반드시 논리적이고 공정한 원칙일 필요는 없다.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 논리적 기초보다는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열정을 불러 일으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 나치 독일이 내세운 인종불평등의 원칙이 바로 이러한 이념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민족의 형성, 민족국가의 건설, 민족주의 운동의 궤적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사회에 투영해 보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유럽의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우리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편파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세계사적 보편성과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어 제2장에서는 서유럽에서 태동한 근대적 민족 형성 과정과 민족주의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것이 제3세계를 포함하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 자리잡았는가를 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 민족형성의 긴 역사적 궤적을 찾기보다는 반제·반봉건이 주축이 된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당시의 동아시아 정치·경제 질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개항에서부터 해방과 분단기까지의 근대적 민족형성 운동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처럼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베트남·예멘의 분단과 통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아직 민족 모순을 해결하고 있지 못한 우리사회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장들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민족관·민족주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통일과 함께 도래할 민족 재결집 시기에 대두될 새로운 민족형성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진단하기로 한다.

제 2 장 비교사적 지평에서 본 민족과 국가의 형성

1. 근대의 혁명: 서유럽의 민족과 국가형성

민족은 일정한 지역 경계 내에 공통의 문화를 갖고 존재하는 자의식 공동체로서 자기 나름의 단일한 주권국가(sovvereign state)를 형성하거나 지키려 한다. 거기에는 주변의 인간 무리와 다르다는 자의식을 길러 줄 공통의 신화와 상징이 내재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사이에 권리와 의무의 평등성을 가정하는 공동체에 대한 동일체감 또는 공속의식(共屬意識)이 존재한다. 즉 민족의 본질은 지역적 한계성과 배타적 주권이다(Anderson, 1983: 15~16). 탄력적일 수는 있지만 무한하지 않은 경계선 안에 존재하면서 자결(自決)을 최상의 공동체 가치로 인식하는 사회조직인 것이다. 특히 서유럽의 민족형성은 신분제의 철폐를 전제한다.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를 빌린다면 신분의 벽을 넘어 하나의 동질적인 사회공동체를 건설하려는 ‘형제적 우애’의 발아였다. 국가의 공권력은 민족의 일반의지를 반영하였고 개개 시민은 이의 형성과 구현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를 가졌다. 그리고 모든 국가구성원은 법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Palmer, 1971: 63~64).

이처럼 민족은 대중의 사회동원이 일정한 수준에 오른 이후에야 나타나는 정치권력의 조직원리이다. 민족은 하나의 동질적 단위체에 속해 있다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구현하려는 대중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18세기 후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역사적 실체와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민족이다. 18세기 후반은 역사의 분기점이었다. 이 때부터 과실을 보기 시작한 세 가지의 ‘근대적 혁명’은 봉건적 질서의 해체를 가속

화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단위체에 대한 모색을 대동시켰다. 하나는 자기팽창의 속성을 지닌 자본에 의한 혁명이었다. 자본은 국가의 힘을 빌어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단일시장의 형성에 나서면서 지방의 봉건적 할거성을 타파하였고(Deutsch, 1966), 중상주의의 기치 아래 식민지를 개척하여 국가의 부(富)를 확대하였다. 이는 혁명이었다. 상품생산과 상품교역의 연결고리를 타고 불어닥친 자본 운동의 창조적 파괴력은 떨어져 있었던 지방 사이에 공통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형성시켜 놓았다. 반면에 재원이 증가한 국가는 자신의 폭력기구를 전문화하고 경제적 하부구조의 건설에 나서면서 언어와 교육정책의 통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자본의 혁명 덕분에 경제적 삶의 기본 단위가 확대되고 구조의 기능적 분화가 가속화할 때 분권적 봉건질서의 타파에 나서려는 중앙 국가권력의 물질적 기반은 더욱 더 커져 갔다(Wallerstein,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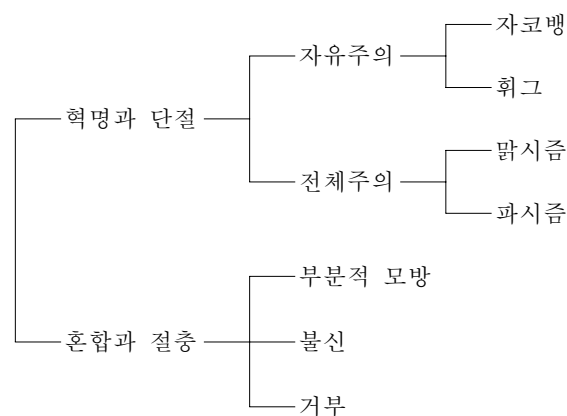
민족형성의 두 번째 추동력은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현실로서, 이것 역시 단위체의 확대를 촉진하였다. 국제정치의 현장에는 공존의 정치를 연출할 조정자가 부재하였고 불신을 억제할 평화의 정신이 부족하였다. 언제나 국가는 생존을 보장할 권력에 목말라 하였고 국제정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쟁준비의 역사였다. 그러나 그러한 파괴적인 정치게임은 민족형성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의 시작이었다. 전쟁준비의 일환으로 신설된 상비군과 전문적 행정체계는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능력을 강화하였고, 그러한 중앙 정치권력의 확대는 다시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강제적 추출을 가능하게 하여 전쟁준비에 일조하게 되었다. 게다가 자원추출은 중앙 정치권력의 강화에 저항하는 내부 정적의 숙청과 포섭을 전제하는 국가형성 그 자체였다(Tilly, 1985: 169~191). 아울러 전쟁수행과 자원추출 및 국가기구의 확대과정에서 권력자는 일부 자본가와 연대전선을 구축할 기회까지 가지게 되었다. 통치행위에 필수적인 자원과 기술을 빌리는 대신 자본의 기본 이익을 보장하고 그 정적을 견제해 주는 것이었다. 민족형성은 이 때부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였다. 자본의 혁명이 국가의 정치적 야심과 만나 지방분권적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넓은 지역을 통합하는 것이었다(Poggi, 1978: Chapter 6).

민족형성의 세 번째 동력은 문화혁명이었다. 특히 교회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주권국가를 대신 올려놓으면서 ‘세속적 신’의 구원으로 동등한 시민의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관념체계의 출현이 결정적이었다. 인간의 총체적 삶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제시하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정치사상과 다를 바 없는 종교에 대한 재해석 없이는 단위체의 변화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민족은 사교의 대전환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세속적 정치권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의 행동을 제약하는 보편적 공동체의 조직원리로서 종교가 살아 있는 한 민족과 주권은 설 땅이 없었다. 따라서 민족국가가 제일 먼저 출현한 서양의 근대사는 종교에 대한 저항의 역사였다. 바티칸에 대한 루터(Martin Luther)의 반항은 크리스천 ‘제국’을 해체하면서 주권의 개념을 탄생시켰고, 인간 이성을 절대시하는 계몽주의는 대중교육의 시대를 열어 언어와 문화의 통일에 기여하였다. 이 때 국가는 민족주의라는 세속적 신앙의 우상이자 문화혁명의 실질적 추진체였다. 특히 유럽의 서북부 지역이 시대의 변화에 민감히 대처하면서 변신의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성서에 나오는 절대 신(神)의 ‘말’을 해석하고 실천할 주체는 타락한 바티칸이 아니라 신자 개개인이라는 루터의 언명이 떨어진 직후에는 국교(國敎)의 신설에 나서면서 정치권력을 해방시켰고 계몽주의의 시대에는 서양 문명의 고전(classics)을 이해하고 과학적 담론에 능란한 인텔리 계급을 키워 관직

에 얽혀 놓았다. 국가 덕분에 신분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식자층이 중앙의 편에 서서 지방과 계층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의 민족을 형성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텔리 계급은 공통 언어를 통해 동질성을 확인하면서 보다 넓은 사회공동체를 상상해 낼 수 있는 세력이었다(Anderson, 1983: Chapter 4).

이렇게 민족국가는 근대의 격동기를 연 3대 혁명의 산물이었다. 국가가 처한 사회적·문화적 조건이 다른 탓에 역사 속에 등장한 민족은 다양한 성격과 형태를 가질 수 있었지만, 민족형성의 배후에는 언제나 지방의 활거성을 타파하려는 국가의 의지와 자본의 운동이 작동하고 있었다. 민족은 야누스(Janus)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근대적 존재였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파와 국가권력의 팽창 및 문화혁명이라는 근대화의 충격 속에 불어닥친 삶의 혼동을 달래 주고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재편의 과정에서 민족은 등장한 것이었다. 물론 안락한 전통사회를 해체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창조하는 근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었다.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지향하면서 권력관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혁명적 민족관념이 있었는가 하면, 전통과 근대의 절충에 나서다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혼합형의 민족관념 역시 3대 혁명의 충격 속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게다가 이미 정해진 하나의 ‘올바른’ 단절과 절충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스(Hass, 1986)에 의하면 단절에는 우선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길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은 다시 자코뱅(Jacobin)과 휘그(Whig)의 경로로 나누어지고, 맑시즘(Marxism)과 파시즘(Fascism)의 길로 갈라졌다. 반면에 절충은 서양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서로 명백히 구분하면서 ‘근대화’를 기술의 영역에 제한하려는 공통성이 있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가치와 문화의 영역에 관련해서는 서양을 부분적으로 모방하거나 불신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부하는 세 가지의 자세가 가능하였다(Hass, 1986: 729~734).

<그림 1> 민족관념의 유형



자료: Ernst B. Haas, "What is nationalism and why should we study 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3, 1986, pp. 729~734.

민족관념은 이처럼 여러 개의 종(種)과 형(型)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내용상 상당히 이질적이고 불확정적인 근대적 이념이다. 외래문화를 철저히 불신하면서 가치보다는 수단의 ‘근대화’에만 나서려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식의 부국강병의 논리나 이미 역사 속에 사라져 신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황금 시대’를 천계(天啓)와 경전의 힘을 빌어 복원하려는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Mussau Khomeini) 식의 복고주의나 민족관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종과 형 사이에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겔너(Gellner, 1983)의 지적처럼 민족주의는 정치 단위와 민족 단위의 일치를 주장하는 조직구성의 원칙이었다. 특히 “국가 안에 존재하는 종족의 경계선이 권력층과 대중을 갈라놓아서 안된다”는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었다(Gellner, 1983: 1). 민족은 단절 아니면 절충의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정한 신분이나 계급 출신의 선민(選民)이 아니라 본래 자결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인민 전체가 민족형성의 주체이자 국가주권의 주인이라는 대명제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었다. 심지어 호메이니의 복고적 신권 정치체제마저 선거와 정당과 의회 정치라는 근대적인 정치적 정당성의 창출 및 재생산 방식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오히려 ‘신의 정당’을 조직하여 거리의 대중을 동원하면서 수동적인 백성을 적극적인 민족으로 변화시키고 자결의 권리를 주창하였다.

2. 시기와 수순: 후발 국가의 경험

민족관념의 다양성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상이한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가지는 3대 혁명의 창조적 파괴력에 기인하였다. 영국과 프랑스처럼 3대 혁명이 절대군주의 시대에 이미 자생력을 갖고 태동한 나라에서는 민족형성의 과정이 점진적이고 순탄하였다. 이미 존재하는 국가의 지역 경계 내에 자리하는 여러 종족의 품 속에 민족적 자의식이 자라나기 이전에 국가와 자본의 혁명이 먼저 일어나 언어와 문화를 동질화하고 광범한 공속의식을 배태시켜 놓은 덕분이었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출현으로 피지배층이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한 19세기의 영국과 프랑스에서 종족은 이미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의 잠재성마저 잃어버린 상태였다. 소수는 다수 종족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고 상층 문화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찾고 정체성을 다져 놓은 실정이었다. 소수 종족의 배타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해체하면서 민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단위를 창조하는 3대 혁명에 대한 소수 종족 자신의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오히려 소수에게 동화는 자연스러운 역사적 진화과정의 결과처럼 보였다. 웨일즈 출신의 지식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종족과 민족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소수 종족의 문화와 언어의 “안락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정하고 편안하면서 떳떳한 죽음”을 맞이하는 한 소수 언어의 소멸은 근대의 시대조건에 부응하는 반겨야 할 현상이었다(Hobsbawm, 1990: 35~36).

3대 혁명이 일어난 시기와 수순은 민족관념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대한 변수 중 하나였다.¹⁰⁾ 대중정치가 출현하기 이전에 민족으로서의 자의식이 생겨나고 중앙 정치권력이 자라난 선발 근대국가의 경우에는 민주화가 종족 분리주의의 이념과 운동을 촉발하면

10) 시기와 수순의 문제에 대해서는 Nordlinger(1968: 494~520)와 Rustow(1967: 120~132)를 참조.

서 기존의 국가 경계를 허물어 버리지 않았다. 정치의 중앙 무대에 등장한 소수 종족 출신의 대중이 다수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키우기 이전에 교육의 혜택을 확대하고 공통의 신화와 상징을 조작하면서 공속의식을 강화한 다수 종족의 포섭 능력 덕택이었다. 선발 근대국가에서 민족형성은 종족 갈등의 원심력을 피하였다. 그리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민족관념은 이미 지적인 이념형을 닮은 자유주의적 개념일 수 있었던 것이었다. 민족에의 귀속 여부는 혈통과 언어보다 개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었고 그 본질은 시민권의 쟁취였다. 그리고 공권력은 일정한 지역 안에 존재하는 민족 전체의 일반의지를 대변하였고 법의 통일적이고 평등한 적용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말하자면 조기에 3대 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족 갈등의 선을 흐려 놓은 덕분에 시민 이외의 다른 기준이 민족의 경계 설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Kohn, 1967: Chapter 5).

후발 국가의 경험은 전혀 달랐다. 3대 혁명의 발생 시점이 상당히 늦었고 그 영향마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균등한 것이 아니었다. 서유럽의 문화권을 넘어서면 하나의 ‘수평적·귀족적’ 종족이 지배층의 자리에 앉아 자원을 추출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제국이 근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여기서 민족과 시민은 지식의 전파고리를 타고 밀려온 외래문화였고 자본의 혁명은 선발 국가를 모방하여 국력을 강화하려는 지배층의 정치적 야심의 결과였다. 따라서 근대화는 자연적이기보다 인위적이었고, 해방적이기보다는 강제적인 사회적 변동과정이었다. 절대군주제라는 후발국가의 ‘낡은’ 정치체제는 강제적 근대화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다. 선발국가가 이미 개발해 놓은 과학과 기술을 국가권력의 강화에 동원하면서 자원을 추출하고 성장의 견인차로서 전략 부문을 키워 나가는 것이었다. 사회는 국가에 대항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소부지(無所不至)한 국가가 부국강병의 깃발 아래 경제적 구조를 개편하고 경기를 조절할 때 비용 청구서나 나누어 부담하는 수동적 정치 동원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후발 국가의 경우 근대화는 사회를 해방하기보다 국가권력을 강화하였다(Gerschenkron, 1962).

역시 시기와 수순은 역사 발전에 결정적인 변수였다. ‘정치’가 절대군주제의 상태에 멈추어 서 있을 때 ‘경제’는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 근대화에 나선 지 이미 오래였다.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연계 방식은 역사를 진동시켰다.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적 혁명 덕분에 살아남은 폐쇄적인 지배층은 국력 증강을 가속화하면서 민족형성에 나섰다. 그러나 여기서의 민족관념은 일정한 지역 경계 안에 존재하면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시민의 개념일 수만은 없었다. 오히려 독일과 이태리의 경우에는 지역의 개념이 불확실하였고 시민권의 강화를 저지하려는 반동의 기운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이를테면 이미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 중세의 신성로마제국이 독일 민족의 고향이 되기에는 너무나 그 경계가 불확실하였고 그 후예들 사이에 문화적 동질성이 부족하였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상당한 역사적 상상력을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조국 통일의 당위성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남부와 북부 지방의 격차가 심하였다. 그러나 선발 국가의 순탄한 역사 속에서 태어난 근대적 민족관념에다 ‘족’(族: ethnie)의 관념을 붙여넣고 전근대적 동일체감을 잠에서 깨운 다음에는 정치적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더불어 살아야 할 민족의 경계가 확실해졌고 통일을 위한 대중의 동원이 더욱 절박해졌다(Smith, 1986: 21~46, 137~138, 141). 즉 정치의 후진성과 내부분열의 역사 때문에 시민과 지역을 족의 관념과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민족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족은 태고로부터 자기 나름의 명칭을 가지고 피아(彼我)를 구분해 온 전(前)근대적

공동체로서 질긴 생명력을 지녔다. 강한 정체감과 연대감을 발동시키는 공통의 언어나 종교가 있었고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오면서 공통의 역사 경험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신화와 상징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 이전에 이미 역사 속에 존재한 ‘동족’에 한정시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시민의 개념을 상상하고 국가의 경계를 설정하려는 유럽 중부와 남부 지역의 민족관념은 진보적이면서 동시에 복고적이었다. 아울러 태고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족의 신화와 상징을 통해 국가와 시민을 상상한 만큼 여기서의 민족관념은 형식적 이성과 낭만적 집단 의식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자연히 민족 전체의 복리를 내세우면서 인내와 순종의 덕목을 설파하는 독재 권력의 정치적 선동에 시민사회가 설득 당할 가능성이 컸다. 아니 여러 개의 국가로 동족이 분열되고 있고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적 혁명 덕택에 폐쇄적인 봉건적 지배층이 살아남아 있는 상황하에서 민족주의의 변형은 필연적이었다. 특히 전쟁 속에서 최상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독일의 봉건적 지배층은 족의 신화와 상징을 복원하고 강화하기에 분주하였다. 3대 혁명의 불균등한 전과 탓에 내부분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독일어권에게 연대의 축을 선사하고 통일 의지를 심어 줄 것은 동족의식 뿐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배층은 민족의 관념 안에 내재하는 민주적 개체의식을 희석시켜 현존 사회질서를 강화하려는 계산에서 족의 관념을 부활하였다.

민족은 상당히 탄력적인 관념이다. 국가체제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계획과 조우할 수 있었고 족의 관념과 만나 근대와 전근대의 시대를 연결시킬 수 있었다. 자결이라는 근대적 가치가 민족관념을 독점하지는 않는 것이다. 시민과 주권의 원칙이 민족관념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다고 해서 다른 사상이 채울 빈 공간이 남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오히려 독일과 이탈리아의 역사에서처럼 족이라는 원시적 관념이 자신을 ‘근대화’시켜 가면서 시민과 주권의 개념 곁에 설 수 있을 만큼 민족관념은 탄력적이었다. 물론 복고적이고 신비한 족의 관념을 통해 민족을 상상할 때 치러야 하는 정치적 대가는 컸다. 족의 관념은 시민의 권리 보다 사회 전체의 복리를 강조하면서 민주적 개체의식을 희석시키고 사회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사장시킬 수 있었다. 힘의 논리를 찬양하고 전쟁의 창조력을 찬미하는 독일식의 정복형 민족관념에 희생당할 동유럽의 역사 역시 침략자만큼이나 족의 관념에 홀려 민주주의를 이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유럽지역의 중부와 동부가 처한 판이한 역사적 조건을 감안하면 의외의 사태 발전처럼 보였다. 그러나 3대 혁명의 전개 과정과 방식을 살펴보면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의 족의 근대적 부활은 필연적이었다.

오히려 족의 관념은 중부보다 동부에서 민족형성에 더 결정적이었다는 말이 한층 더 정확할 것이다. 유럽의 동부 지역은 자기 나름의 국가를 가져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근대 직전에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족의 거주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기본 질서는 제국이었다. 독일이나 러시아 아니면 터키 계열의 귀족층이 수평적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권력의 정상에 앉아 낙후한 여러 종족을 지배하는 정치적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어나는 근대화는 이미 존재하는 종족적 이질성을 해소하기 보다 오히려 악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시장이 팽창하면서 제국 내부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노동의 이동이 촉진되었다. 여기에 종족의 이주를 권장해 온 지배층의 근대화 전략 탓에 동부의 세 제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어와 종교가 다른 소수 종족이 다수의 거주지 안에 부락을 여기저기 형성하여 살아가는 일종의 종족 모자이크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강과 산을 넘기만 하면 다수가 언제나 소수 종족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옹하고 설킨 다(多)종족·다(多)종교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내부분열은 상당한 기간 사회를 공중 분해시킬 만한 갈등의 불씨로 타오르지는 못하였다. 아직 민주적 시민의식과 민족적 자의식이 자라나지 않은 덕분에 소수족은 지배층이 폭력을 통해 다스릴 수 있는 무기력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지배층에 의한 3대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다종족 사회 내에 잠재하는 원심력이 작동하고 혼동의 시대가 열렸다. 지배층은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력을 배가시킬 근대화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대 혁명은 제국이라는 단위체의 공중분해로 치달을 갈등의 확대 재생산과 다를 바 없었다. 중앙정부의 통제능력이 미약하였던 전근대 시대에서 피지배 종족은 방치상태에 놓여 변방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을 '민족'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근대화 정책에 수평적·귀족적 지배층이 나선 이후에는 달랐다. 지배층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파는 부락 중심의 사회공동체를 해체시키면서 피지배 종족을 불안정하고 착취적인 시장으로 내몰았고 국가의 문화적 동질화 정책은 태고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수 종족의 언어와 종교와 신화를, 즉 정체성을 파괴할 태세였다. 반면에 팽창하는 자본주의의 고리를 타고 이주해 온 외지인은 부락사회의 동질성을 흐려 놓았고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 분화 속에서 생겨나는 사회계급과 계층은 새로운 연줄망과 사상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Hobsbawm, 1990: 109; Gellner, 1964: 167~172). 그러나 국가권력의 폭력에 기대어서 사회를 지배하고 착취해 온 수평적 귀족층은 대안을 설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배층이 순치하고 관리하기에는 동시에 발생한 3대 혁명의 창조적 파괴력이 너무 컸고 사회변동이 지나치게 빨랐다. 아니 자본과 국가와 문화의 혁명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일어나기보다 동시에 발생한 탓에 소수와 다수 종족을 포괄하는 하나의 열린 동일체감이 등장할 기회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게다가 대화와 흥정의 채널을 차단하고 권력을 독점해 온 제국의 폐쇄적인 지배층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 버리고 민주주의를 실험할 만한 자기 개량의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였다.

오히려 무너진 사회적 연대의 축을 복원하고 사상의 공백을 채우면서 근대 시대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개별 종족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역사 발전의 계 단계 중 서너 개를 이미 마치고 근대에 선 선발 국가는 혁명을 막 시작한 동유럽의 소수 종족에게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현존 질서에 대한 저항의식을 심어 주는 사상의 제공자였다. 일단 족의 관념으로 선발 국가의 민족관념을 재해석하면 삶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자명해지고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민족적 개념에 족의 관념을 붙여넣고 현실을 진단하면 혼동과 파괴의 주범은 언어와 종교가 다른 제국의 지배층이었다. 반면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주권 선포였다. 지배층처럼 자기 나름의 국가를 가지면 각종 사회적 불평등이 사라지고 해방의 세계가 오리라는 저항 민족관념이 생겨난 것이었다.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고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소수 족에게 '나'의 행복은 종족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국가의 건설에서부터 개개인의 해방이 시작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박호성, 1992: 38~39). 그리고 그러한 각성은 제국을 해체시켰다. 일단 태동한 민족관념의 확산에 제동을 걸 만한 것은 없었다. 스미쓰(Smith, 1979: 196)의 지적처럼 민족관념은 자신을 일소하려는 폭력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 뿌리가 더욱 더 강건해졌고 그 기운이 거세어졌다. 여기서의 민족관념은 인간 해

방의 근대적 사상을 등에 업고 족의 권리를 재해석하면서 3대 혁명의 시련기를 극복하려는, 말하자면 이상과 청중과 운동의 추동력을 다같이 갖춘 이념이자 낯설지 않는 전근대의 관념으로 근대를 설명하는 역사해석이었기 때문이다.

3. 탈(脫)근대 시대의 근대적 현상: 제3세계의 딜레마

민족은 그 본질 속에 보편성과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족은 근대화의 충격 속에 불어닥친 삶의 혼동을 달래 주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새로운 개편 원리였고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이론이었다. 특정한 신분출신의 ‘선민’보다 대중 전체의 동의에서 정당성을 발견하는 평등사상이 민족형성의 대전제였다. 그러나 국가·자본·문화의 3대 혁명이 일어난 시기와 수순 및 방식이 지역이라는 국제정치 하위 체계마다 달랐던 탓에 민족관념은 다양한 근대적 사상과 조우하면서 여러 개의 종(種)과 형(形)으로 갈라졌다. 민족에의 귀속을 개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결단의 문제로 파악하는 영국과 프랑스 식의 해석이 있었는가 하면, 전근대적 공동체인 족에 한정시켜 민족을 상상하고 국가의 지역 경계를 설정하는 후발 국가형의 해석도 있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근대 직전에 존재한 정치적 단위체의 성격에 따라 정복형과 저항형의 관념으로 나뉘어진다. 즉 민족은 연속성과 변화 사이에서 존재하는 공동체였다. 조직 개편의 배후에는 신분제를 해체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3대 혁명의 창조적 파괴력이 항상 거칠게 작동하고 있었지만 공동체 조직의 경계는 결코 역사적 진공상태에서 그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근대’의 시기가 늦어지고 3대 혁명의 발생이 동시성을 띠는 동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민족의 형성은 족이라는 전근대적 관념의 ‘근대화’로 귀결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민족형성은 전쟁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다. 3대 혁명에 먼저 성공한 선발 국가는 소수와 다수 족의 분열을 억제하면서 국력을 신장시켰고 근대의 시대에 전근대적 상황에 놓인 주변부를 침략하고 수탈하였다. 게다가 선발 민족이 축조한 국가 중심의 무정부적 국제체계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기에 부적절한 불신으로 가득한 정치적 무대였기 때문에 세계는 언제나 오판과 오산으로 인한 전쟁 발발의 위협성에 떨어야만 하였다. 민족의 조기 형성에 성공한 서유럽의 국가는 발전과 문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자기 기만적인 ‘백인의 짐’을 짊어지고 주변부를 강탈한 침략자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대전이라는 자멸의 수렁으로 자신을 내던진 무지하고 모순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민족국가를 대체할 대안은 없었다. 오히려 세계사에서는 민족형성의 시련과 실패가 민족형성의 성공 못지 않게 갈등을 악화하고 전쟁을 촉발시키는 기폭제였다. 민족국가의 세계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해서 민족국가에 대한 부정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려면 근대화의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난 족마다 자기 나름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전근대적 상태에 처한 무기력한 족은 오히려 침략을 유혹하였고 민족형성의 좌절이 전쟁을 촉발시켰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제한적이거나 ‘단위’에 대한 논쟁에 해결점을 제공해 주는 역사의 커다란 분기점이었다. 전쟁에 지쳐 버린 열강은 이 때부터 선진 자본주의 진영 내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배타성을 순치 할 공동 관리 체계의 형성에 나섰다. 아울러 해방의 이념 아래 조직 역량을 키워 온 주변부에 밀려 자결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제국을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저발전 상태가 주권 선포의 권리를 결코 박탈할 수는 없다는 인식 하에 민족의 '자격 조건' 조항을 헌장에서 삭제한 1960년 UN 총회의 결의는 종전 직후부터 거세게 일기 시작한 탈(脫)식민화를 사후 승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민족의 자결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Wallerstein, 1992: 22~33). 그러나 국경의 재편성 시기에 존재하는 족의 지역 분포가 전방과 후방의 경계 없이 얽히고 설킨 모자이크형인 경우에는 탈식민화가 단위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을 손상시킬 격렬한 소수 족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은 지역은 서유럽과 동북아시아 뿐이었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강제 이주 및 '인종 청소' 정책 덕분에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족의 수가 전체 인구의 3%를 넘지 않았다.

서유럽의 지역 경계를 넘어서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동양관 동서냉전이 터지면서 내부 분열의 함정에 빠진 한국과 중국에서 민족형성은 여전히 미완의 혁명으로 남았다. 게다가 상당수 신생국가의 지역 경계 안에는 다수의 권자를 차지한 족과 다른 다이아스포라(diaspora)가 기존 공동체의 '민족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리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심지어 백 여 개의 족이 사는 신생국가 마저 있었다. 반면에 종전 직후에 동유럽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군사적 전초기지를 건설한 소련방(蘇聯邦)은 민족국가의 형상을 빌린 제국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와 족의 관계였다. 세계대전의 충격과 탈식민화의 물결을 타고 태어난 국가 중 상당수는 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단위체였다. 오히려 19세기 중반의 중유럽 역사 속에서 태어나 동(東)으로 퍼져 나간 '민족은 족의 근대화'라는 단위체 형성의 새로운 방정식에 불안해 할, 즉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종족의 경계선에 따라 갈라지는 국가사회였다(Smith, 1979: 196). 따라서 선진 자본주의 진영 내에 세계화와 정보화의 혁명이 일면서 하나의 국경 없는 경제가 태어나고 민족국가가 문제 해결의 수단 및 단위로서의 적실성을 잃어 갈 '탈(脫)근대적'인 20세기 후반에 와서(Ohmae, 1990) 상당수의 주변부 국가가 종족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니다.

20세기 후반이라는 동일한 시간대에서 중심부와 주변부는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전자가 문제해결수단으로서의 민족국가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자주의적 정책망을 설치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때, 후자는 국경을 세우고 '근대'를 막 시작한 것이었다. 따라서 서유럽의 지역 경계를 넘어서기만 하면 부락공동체의 전통적 삶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단위체를 창조하려는 국가·자본·문화의 3대 혁명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다수 족에게 창조적인 것으로만 보였던 민족형성이 소수 족에게는 변방의 자유를 박탈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기만 한 사회변동으로 비추어졌다. 따라서 다수 적에 맞서 자기 나름의 국가를 가지려는 분리주의 운동이 잇따라 일어나고 종교로 무장한 종족세력이 자라나 근대화라는 이단과의 성전을 선포하는 것이 20세기 후반의 주변부적 현실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Kodmani-Darwish, 1991/92: 43~53; Newman 1991: 467~472).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비엔나 체제 이후에 일어난 세 번의 거대한 '민족형성의 물결'에 견줄 만한 것이 21세기의 문턱에서 주변부를 강타한 소수 족의 분리주의 운동이었다(Mayall, 1992: 22). 족의 근대화라는 방정식이 그 파괴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그렇다고 소수 족마다 민족형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91년 이전의 전후 국제관계는 분리주의 운동의 가능성보다 한계를 더 많이 보여 주었다. 즉 탈식

민화의 물결을 타고 주권을 선포한 국가는 많았지만 신생국가의 ‘민족성’을 부정하면서 분리에 성공하고 민족화한 족은 싱가포르와 방글라데시의 건국세력 뿐이었다. 신생국가의 지역 경계 안에 존재하는 여러 족이 험난한 동질화의 과정을 이미 마친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공동체 형성의 기본 단위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국경분쟁 및 사회개편의 소지가 적었다. 사실 이 지역의 국가경계는 종족분포와 생태계의 현실이 철저히 무시된 채 열강의 편의에 따라 식민지 시대에 그어진(Young, 1982: 75), 말하자면 단순한 선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계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그 정당성을 부정한 적은 없었다(Jackson and Rosberg, 1982: 1~24). 국경 저편에서 동족이 분리주의 운동을 펼칠 때조차 국가권력을 장악한 다수족은 국경을 넘어 동족의 편에 서기를 망설였다. 국경의 불가침성이 무너지면 자국 내에 자리하는 소수 족 마저 타(他)국가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분리주의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려 탓이었다(Herbst, 1989: 673~692).

물론 국경의 불가침성이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프리카는 이념과 신앙의 갈등이 족의 배타성을 자극하면서 역사의 전진을 저지하는 분열의 대지였다. 지구촌의 시대라는 탈근대론적 수사(修辭)가 정치학의 담론영역에 넘쳐흐르는 21세기의 문턱에서조차 아프리카는 변화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더 깊은 내전의 수렁에 빠져 퇴보하는 나라가 속출하였다. 샤리아의 원리에 따라 신권정체를 세우려는 이슬람의 부활은 나이지리아와 세네갈과 수단을 전쟁터로 전락시켰고 앙골라와 라이베리아의 이념적 지형을 갈라놓은 좌우의 대치선은 이른바 탈(脫)냉전의 시대에 살아남아 치열한 내전을 재개시키거나 촉발하였다. 게다가 신앙과 이념의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한 단순한 권력투쟁의 게임마저 가세하면서 추악한 종족분쟁에 불을 지르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내전을 피해 때를 지어 탈출하는 난민은 타국가 내에 존재하는 종족간의 힘의 균형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분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사하라 이남의 ‘검은’ 아프리카에서 족의 정치적 부활을 지원하고 재촉하는 변수는 많다. 우선 이 지역의 국가 중 대다수는 조각난 다종족 사회로서 과반수 이상의 위치에서 분열을 억제하고 사회를 동화시켜 가는 하나의 지배 종족이 부재하고 종족의 분포마저 대화와 흥정의 공간을 넓히기에는 불리한 형세를 띤다. 사실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혼란이 다종족 사회의 필연적 종착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Huntington and Dominguez, 1975: 18~32). 서유럽의 몇몇 소국처럼 서너 개의 핵심 종족이 대칭적인 힘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는 평화가 가능하였다. 중재 역할을 담당할 제3의 종족이 존재하고 갈등의 파괴력을 배가시키는 힘의 대칭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의 다종족성과 다종파성에 맞서 대화 및 흥정과 절충의 정치를 개발하고 분열을 능수능란하게 차단해 온 서유럽 소국의 경우와는 달리(Lijphart, 1977),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전혀 다르다. 여기에서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할 위기상황에 놓인 70여 개의 소수 종족에 속한다. 공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계약의 체결에 나서기에는 종족의 수가 너무 많고 권력의 분포가 너무 비대칭적인 것이다(Jalali and Lipset, 1993: 58).

역사는 이러한 아프리카에게 대단히 잔인하였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열강이 종족의 이질성을 무시한 채 편의에 따라 식민지의 지역 경계를 설정한 후 근대화해 나갔다. 그러나 ‘사회변혁’의 목적이 수탈과 착취였던 탓에 이 지역의 근대화는 그 품속에 암흑의 미래를 잉태하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 상황과 편의에 따라 개개 종족의 부와 권력을

늘리고 줄이면서 식민지 사회를 분열시키고 동조세력을 키워 나간 제국의 분할통치 전략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종족 사이에는 피아를 선명하게 구획하는 의식이 자라났고 상대방을 무조건 견제하고 거부하려는 커다란 불신의 벽이 생겨났다. 심지어 제국주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 범주(category)마저 생겨나는 실정이었다(Young, 1982: 79). 족을 기준으로 삼아 물질적 보상을 나누어주는 제국의 분할통치 전략을 목격하면서 다양한 부락공동체가 종족화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부와 권력이 배분되는 분할통치의 잔칫상에 손을 대려면 자원분배의 기준인 종족의 형상을 띠어야만 하였다.

탈식민화 시대 역시 다를 바 없었다. 종족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근대화의 파괴성은 오히려 제국의 해체로 더욱 강렬해졌다. 열강이 철수하자 분할통치를 통해 힘의 관계를 조작할 제3의 ‘안정세력’이 사라진 것이었다. 남은 것은 파편화와 비대칭성의 내부 모순에 결박당한 족의 권력관계 뿐이었고 기다리는 것은 족의 배타성에 불을 질러 사회를 공중분해시킬 파괴적인 근대화였다. ‘낯은’ 족의 관념은 근대화로 사라지지 않았다(Connor, 1973: 1~21). 오히려 신생국가는 종족을 가려 가면서 인원을 충원하고 자원을 배분하기에 바빴다. 최악의 분열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여러 개의 종족을 묶는 새로운 지배동맹이 결성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국가는 분열상황을 타파할 동맹형성의 추진기였던 동시에 근대화의 과실을 독점하기 위한 종족분쟁에서의 전리품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역할은 종족관념의 소멸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이 속한 족의 운명에 따라 일상적 삶의 형편이 달라진다면 족은 단순히 전근대적 시대의 역사경험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신화와 상징과 문화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족은 자원배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고 개개인의 생존 기회를 결정하는 현재의 문제였다.

족의 부활은 필연적이었다.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승리는 언제나 대중동원과 조직결성에 능란한 정치세력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무기는 족의 배타성이 대주였다. 언어와 종교와 문화에 질게 배어 있는 족의 특질만큼 피아를 선명히 구분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족에의 귀속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빈곤상태를 탈출하는 자에게조차 타고난 족의 ‘혈통’을 부인하고 거부할 길은 없었다. 자연히 근대화라는 폭풍이 몰아칠 때 족에 견줄 만한 자기방어의 수단 및 권력투쟁의 무기는 많지 않았다. 선명하고 안정적인 족의 카테고리는 근대화의 과실을 차지하기 위한 대중조직의 결성에 알맞은 토양이 되는 것이다(Smith, 1981). 그렇다면 족의 정체성과 연대성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는 문화적 카테고리로 남아 있다가 근대화의 충격이 불어닥칠 때에는 물질적 이해관계와 얽히고 설키면서 민족화를 지향하는 야심찬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난다.

족의 질긴 생명력과 그 역할의 가변성을 보다 확실하게 증언해 주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의 역사이다. 21세기의 문턱에서 소련은 해체의 시련에 내던져졌다. 족의 후진성을 경멸하고 민족소멸의 필연성을 점친 맑스의 이론과는 달리 족마다 독자적인 정치체의 건설에 나서는 것이었다. 유럽의 중부와 서부 지역이 공동결정과 정책조정의 장치 및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역 차원의 보다 넓은 단위체를 모색할 때 동부의 소련은 해체의 시련을 맞보았다. 연방 해체의 원인은 다양하다. 스탈린이 건설해 놓은 전체주의 체제는 혁명과 해방의 사회주의 이상을 농간하면서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구조적 모순 및 긴장을 심어 놓았다. 게다가 벽찬 서방세계와의 군비경쟁은 이미 만성적 적자상태에 놓인 경제에 사형 선고를 내리다시피 하였다. 위기를 탈

출할 비상구는 없었다. 명령체제를 수리하려는 개혁과 개방의 신(新)사고 정책은 경제를 살리기보다 파멸시켰고 이념적 개혁의 가능성보다 한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시장의 전면적 복원을 거부한 채 체제의 내부 장식만을 수리하는 개혁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여기서 죽은 부활할 기회를 포착하였다. 중세부터 폭력적인 전제정치만을 목격하면서 살아온 국가사회인 탓에 사회주의 체제의 추락과 함께 불어닥친 힘의 공백을 다시 채워 주고 정신적 허전함을 달랠 이념적 대안은 많지 않았다. 사회라는 전체보다 부분인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적 전통이 부재하였고 전환기의 고통을 덜어 줄 발전 전략 역시 보이지 않았다. 방황하는 대중의 충성심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이념 종족의 자결을 역설하는 소(小)민족주의 만큼 ‘시장성’을 가진 것은 없었다. 소련의 종족 정책 안에 내재하는 정치적 모순과 긴장이 전환기의 경제적 위기와 맞물리면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Naumkin, 1991/92: 38~42). 그러나 사회주의적 종족정책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소련은 소수 족의 고향에 공화국과 자치주를 설치하면서 평등의 형식을 갖추고자 노력하였고 지방 출신의 당(黨) 간부층을 키워 족의 소외감을 적절히 달래 주었다. 이어 공화국과 자치주의 당 간부층에게 ‘게임의 원칙’을 밝히면서 중앙권력을 방어하였다. 분리주의의 색채를 떨지 못할 문화적 운동은 금지하는 대신 지방 간부층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은 분명히 지켜 주겠다는 것이 원칙의 줄거리였다.¹¹⁾ 그리고 스탈린 사후의 분권화 시대에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익갈등의 제한적 표출을 허락하였다(Hough and Fainsod, 1979).

그러나 그러한 종족정책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방 간부층의 충원 기준 중 하나가 ‘혈통’인 탓에 족의 관념은 더욱 더 강렬해졌다. 게다가 분권화는 소수 출신의 당 간부층에게 조직역량과 대중기반을 강화할 기회를 주었다. 연방정부의 통제력은 개혁과 개방의 시대 이전에 이미 부식상태에 놓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폭발 시기를 연기시킨 것은 국가의 폭력과 사회주의 이념의 동화력 및 경제적 선심공세였다. 특히 자본이 축적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한 이익갈등의 원심력을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자상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경제가 정체성의 위기에 놓이게 된 1970년대부터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공화국과 자치주의 다수 족은 소수를 더욱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권력과 부를 독점하였다. 아울러 나누어 가질 자원이 부족해지자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역시 더 한층 치열해졌다. 공화국 내에서 종족차별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다수 족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게 되자 지방의 당 간부층은 권력투쟁을 연방정부의 차원으로 더욱 확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에 대한 중앙당(黨)의 대응은 ‘사회주의적’인 것이었다. 즉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소연방 내의 ‘유럽’ 지역에게 희생을 독촉하고 낙후지대인 소연방 내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면서 공화국 사이의 발전격차를 줄여 나가려 하였다.

따라서 공산체제가 무너질 때 소민족주의는 이미 시장성을 확보한 대체 이념이었다. 공화국 내에서 차별과 배제의 수모를 겪은 소수 족에다 연방 차원에서 자원을 빼앗긴 보다 선진적인 공화국은 연방주의적 정치공동체에 대한 깊은 불신과 회의에 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라는 ‘체제’의 위기를 ‘민족’의 위기로 변형시키면서 거대한 소

11) 사회주의적 민족 정책의 모순에 대해서는 Roeder(1991: 196~232)를 참조.

연방의 해체에 불을 당긴 것이 잘사는 코카서스 지역과 발틱 연안지역이었던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지역의 작은 연방의 고리를 잘라 버리고 타(他)공화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경제적 재건의 기회를 포착하려 하였다. 상당한 수준의 근대화를 이미 달성하고 과도한 조세부담을 짊어진 선발 공화국으로서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었다. 반면에 중앙의 재정지원에 기대어 살아온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공화국과 자치주는 분리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배타적인 종족관념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소연방의 해체로 끊어져 버릴 재정적 지원이 걱정이었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과 맞물리면서 폭발해 버린 족의 배타성은 창조적이기보다 파괴적이었다. 대다수의 공화국은 독자 노선을 채택하기에는 경제 단위가 너무 작았고 제2의 분리주의의 바람을 방지하기에는 사회가 내부적으로 너무 이질적이었다. 오히려 ‘소’민족의 주권 선포는 공화국의 지역 경계 안에 존재하는 더 작은 소(小)소수 족의 품속에 마저 거창한 민족화의 열망을 불어넣고 학살과 보복의 정치를 촉발하는 형국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 지역과 그루지야의 아브하즈 지방 등에 붙어닥친 내전의 비극이 이를 잘 보여 주었다(Burg, 1993: 162~168). ‘민족은 족의 근대화’라는 19세기 중반의 방정식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이었다. 아울러 ‘자결은 투쟁의 결실’이라는 철칙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제 3 장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국가 건설의 좌절

1. 제국주의의 충격

앞장에서 살펴본 다른 주변부 국가의 현실에 비하면 동북아시아는 ‘행운아’였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 3국은 유럽이 중세의 ‘암흑 시대’에 놓여 분열과 전쟁을 반복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 이미 오래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공유해 온 동질적인 사회였다. 상당한 수축과 팽창의 가능성을 보였던 정치공동체의 지역 경계는 이미 중세에 그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송(宋)대에 중화의식(中華意識)을 내재화하면서 현재의 지역성에 가까이 다가갔고, 일본은 중화에 준하는 천하관(天下觀)을 도꾸가와막부(德川幕府) 시대에 발현시켰다. 반면에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 및 신라(新羅) 3국을 아우르는 일통삼한(一統三韓)의 넓은 동족의식 아래 만주 평야를 동경하거나 회복하려던 진취적 천하관은 사대주의라는 한국의 다른 천하관에 밀린 채 겨우 연명해 오다 고려(高麗)에 와서는 그 설 땅 마저 잃어버렸다. 고구려의 후예라고 자처한 발해(渤海)가 멸망하고 수(隋)와 당(唐)과 대적하였던 ‘황금 시대’의 신화를 파괴하는 몽고(蒙古)의 무자비한 침략과 점령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적 위기의 결과이자 원인인 사대파와 북진파의 당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사대파였다. 만주 이남의 작은 공간에 한정시켜 한족(韓族)의 천하를 설정하고 보존하려는 관념이 정착한 것은 바로 이 때부

터였다(임현진·공유식·김병국, 1992: 22~24).

역사는 언제나 약자에게 잔인한 존재인 것 같다. 한족의 좌절 속에서 동북아시아는 이미 '중세'부터 '근대'의 지역 경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족의 생활공간을 안정시켰다.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황금 시대의 영웅과 신화에 잔잔한 희열을 느끼는 한족조차 '중세'의 좌절로 이미 축소되어 버린 자신의 생활 공간에 만족할 만큼 동북아 지역체계 안에서 국가 경계는 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흐름을 버티어 내면서 족의 관념 속에 강렬히 뿌리내렸다. 따라서 서세동점(西勢東占) 직전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상당히 자기 충족적인 정치공동체였다. 수축과 팽창의 과정에 놓였던 이전의 생활 공간은 잊은 채 현존하는 국가의 지역 경계 내에서 족을 상상하고 보존하려는 것이었다. 동유럽에 비하면 프랑스 대혁명의 민족관념을 소화해 낼 만한 국가의 지역 경계와 문화의 동질성이 이미 근대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탄한 민족형성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사회의 상층과 하층 사이에 강건한 연대의식을 불어넣고 자신의 국가 속에서 하나의 적극적인 행위주체로 작동하는 인간상(像)을 건설하려면 신분제를 해체시킬 3대 혁명이 일어나야 하였다. 하지만 자본과 국가와 문화의 3대 혁명을 촉진할 동력은 동북아시아 3국 내에 미약하였다. 서세동점 이전의 사회공동체는 대자적 민족보다 수동적 공속의식을 가진 족일 뿐이었고 주민은 살아있는 시민이 아니라 잠자는 흩어진 백성에 지나지 않았다(임현진 외, 1992: 22~24).

동북아시아에서도 동유럽의 경우처럼 '족의 민족화'에 불을 당긴 것은 외적인 충격이었다. 국가경계의 설정을 방해할 동유럽식의 종족 모자이크(ethnic mosaic)는 없었지만 더 이상 진화하기를 거부해 온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는 족을 민족화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서세동점의 시대는 달랐다. 서양의 상인과 군인과 선교사가 근대적 관념을 전파하고 서양의 힘을 과시하자(Iriye, 1967), 동북아시아에서는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위한 본능적이다시피 한 자기 방어적 운동이 일어났다. 제국주의의 격렬한 해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부식하기 시작한 전통적 질서를 파괴하면서 변화의 넓은 창을 열어 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동북아시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는 역사의 별다른 사전 준비 없이 불어닥친 외부 충격의 결과였던 만큼 근대로의 이행기는 창조적인 정치실험보다 지적 혼동과 수난의 시대로 그쳐 버렸다. 구질서가 무너질 때 신질서는 아직 탄생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침략을 부추기는 내부 분열의 악순환이 지속할 뿐이었다.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전통과 근대 사이에 다리를 놓고 족의 삶을 방어하려는 새로운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Fairbank, Reischauer, and Craig, 1973: 558~647).

2. 19세기 후반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경제체제

제국주의 침략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청(淸)을 중심으로 한 조공관계(租貢關係)로 특징 지워진다. 이 관계에서 청과 주변국가의 관계는 청의 종주권으로 표현된다. 이 관계는 청과 주위국간의 주종관계를 유교의 상하질서에 입각해서 드러내는 형식적이고도 의례적인 국제관계이다. 형식적이란 주위국의 내정과 외교의 불간섭과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의례적이란 이른바 속국이 상국에게 바치는 조공이나 왕위계승을 인정하는 책봉, 또는 청의 연호나 책력(冊曆)의 사용을 통해서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때문에 이 관계는 식민지에서 자행하는 경제수탈이나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자본

주의 국가의 국제관계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김정기, 1988). 그러나 청이 1842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이후 동아시아에서 청의 종주권은 1862년의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 1885년의 영국의 버마 귀속, 1871년의 러시아의 이리 점령 등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청의 종주권이 막이 내리고 새로운 세력재편기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을 중심으로 한 세력 다툼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1876~1894년에 이르는 제1시기는 제국주의에 대한 세계 분할이 진행되는 국제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쟁탈전으로, 청일전쟁을 기점으로한 1894~1905년의 제2시기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으로 특징지어지고, 1905년 이후의 제3시기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일전쟁까지의 1시기는 청의 종주권 강화정책, 일본의 대륙정책, 러시아의 남하정책이 대립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 청은 양무운동(洋武運動)을 일으켜 근대화의 노력을 경주하면서,¹²⁾ 조선에 대해서는 종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여기서 종주권 강화정책이란 조선의 식민지화를 뜻하며 과거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와는 달리, 여타 제국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내정간섭과 경제적 침략을 자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무파의 조선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되는데, 첫째, 조선군대의 재편과 무력증강을 통하여 일본과 러시아를 막아 보려는 전략이고, 둘째는 서양 열강과 조선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권고하여 당시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분산시켜 보려는 것이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전부터 조선 침략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었고,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연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 침략을 진전시켜 나갔다. 독일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메이지유신의 성공 이후 일본은 내부적으로 ‘정한논쟁’(征韓論爭)을 거쳐, 1875년 드디어 강화도 사건을 일으켰다. 조선의 개방에 이익을 얻으려는 서구 열강의 지지 속에서 조선에 상륙한 일본은 체계적인 조선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침략에 주력하다가 1884년 갑신정변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선 제압에 나섰다. 결국 종주권을 수호하려는 청과 조선을 자신들의 이익선(利益線)으로 간주하는 일본의 경쟁은 동학농민군의 전주입성을 계기로 군사적 대결로 귀착되었고,¹³⁾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막대한 배상금과 요동 및 대만을 할양받은 일본은 조선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듦으로써 제국주의 국가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었으나 예기치 못한 러시아의 간섭을 받는다. 부동항에 대한 집착과 만주 침략을 꾸준히 노리고 있던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움직여 요동반도의 할양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삼국간섭을 했던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제2시기에 있어 핵심적인 세력인 러시아는 강력한 해양국이 되기 위하여 부동항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조선은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1860년대까지 흑룡강 좌안과 연해주지방을 중국으로부터 확보하고, 1884년 한러조약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1886년 한러밀약을 통해

12) 양무운동이란 중국의 정치·외교를 주도하는 만주출신의 한인(漢人) 지방관이 부국강병을 목표로 서양의 군비와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체제를 재편하려 하였던 조직적 움직임이다. 이는 1860년대 동치중흥(東治中興)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그 주체의 관료성·매관성 때문에 실패한 운동이다.

13) 이 시기 영국의 외무장관에 의하여 조선의 분할 점령 안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영국의 제안에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이면으로 전쟁 준비를 하였다.

영흥만 조차를 요구하는 등 조선에의 진출을 꾀하다, 1891년 초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부설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본격적으로 상륙하였다. 이 결정은 러시아의 대극동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베리아의 개발과 해양대국인 영국에 대한 견제라는 목표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요동확보는 시베리아철도가 이어지는 부동항의 종착지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통해 한반도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이는 민씨 일가의 러시아에 대한 과대평가에 힘입어 순조로운 대조선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의 조선 진출은 전반적인 극동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은 러시아의 만주침략을 위한 담보물로 간주되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고, 아관파천(俄館播遷) 등으로 획득한 한국에서의 정치적 우위를 지켜 나가는 현상유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러시아로 인해 조선의 식민지화에 실패한 일본은 ‘만한교환’(滿韓交換)을 러시아에 협상 카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 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상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확고한 기반 구축에 염려하고 있던 영국과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전쟁준비를 본격화하였고, 미국 및 유럽 각국과의 외교적 준비를 마친 후 러시아와 개전(開戰)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중 일본은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을 조인시켜 조선의 재정·외교권을 장악했고,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해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으며, 같은 해 7월의 카츠라-태프트밀약, 8월의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한국의 식민화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었다.

3. ‘한족’에서 ‘한민족’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항일투쟁

조선 후기는 단지 정제된 사회는 아니었다. 그것을 자본주의의 맹아라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꾸준히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그에 걸맞은 사상적 발전이 있었다. 상공업의 발전, 토지제도의 개혁, 민권의식을 보여주는 실학사상을 들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에 의한 개항과 더불어 한국민족은 반봉건이라는 과제와 아울러 반제국주의라는 과제를 새로 떠 안게 되었다.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을 통해서만 해결될 이 과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때문에 1945년 해방 이후로 그 궁극적 해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줄기찬 시도는 19세기말부터 꾸준히 경주되었다.

여기서는 1919년 3·1운동 이전과 그 이후의 민족운동을 구분하고자 한다.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이 민족의식 형성에 있어 초기라고 한다면, 이후는 민족의식의 형성이 완결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3·1운동 이전의 모든 운동이 그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근대 민족형성의 핵심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에 있어 완전한 공화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반면, 그 이후는 공화주의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¹⁴⁾

14) 이러한 구분은 절대주의적 민족국가를 형성했던 독일, 일본의 사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낳는다.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화와 위로부터의 자본주의화라는 전통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이 문제는 기실 개화파의 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필자들은 자본주의가 민족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양자 사이에는 선택적 친화성(selective affinity)이 있으며, 자본주의의 발전은 위로부터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노동계급의 형성을 전제

3.1. 개항에서 3·1운동 이전까지의 민족운동

이 시기를 다루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한국 근대 민족운동의 전개를,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 개화(開化) 사상, 동학(東學) 사상의 세 가지 주요 흐름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사상사적 흐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당시의 사회경제적 흐름에 따른 민족운동의 추세를 간과함으로써 각 운동의 역사적 공과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조선 후기 이래의 봉건체제의 붕괴에 따라 조선사회의 계급구조는 급속하게 재편되었다. 당시 사회의 계급 구성은 크게 지주층(地主層), 요호·부농층(饒戶·富農層), 그리고 소농·빈농층(小農·貧農層)으로 나누어진다. 지주층은 기존의 중세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던 층이었고, 사회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성장한 집단이 새로운 사회세력으로서의 요호·부농층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몰락하여 가장 불이익을 당하였던 집단이 소농·빈농층이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급구조와 더불어 권력관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관계에 따라 정권담당지배층과 정권배제지배층 그리고 피지배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당시의 사회운동의 주체를 구분해 보면 첫째, 봉건지배세력 중 정권담당층, 둘째, 봉건지배세력 중 정권에서 배제된 재야유생, 그리고 피지배 민중부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봉건사회의 해체에 따라 형성된 요호·부농층은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못함에 따라 시기별로 위의 세 세력과 연합·분리하는 형태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한국 근대의 민족운동과 그 사상적 기반은 다음의 세 방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¹⁵⁾ 첫째, 민족문제에 대한 집권관료세력의 대응으로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과 개화사상(開化思想)이 포함되고,¹⁶⁾ 둘째, 재야유생층의 대응으로서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이며, 셋째, 농민층 혹은 민중의 대응으로 동학사상(東學思想)이 해당된다.

1) 집권관료세력

이 세력은 동도서기파운동과 개화운동으로 대표된다. 동도서기파의 사상적 기반은 동도서기 사상이고, 개화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개화사상이다. 박규수(朴珪壽)로부터 시작된 동도서기 사상은 1880년대 초에 이르러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사상은 유교적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동계급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봉건적 예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 국민주권 형성의 지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영국에서조차 보통선거권의 완전한 실시가 훨씬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할 때, 국민주권 사상의 성립을 그 지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개화파는 완전한 국민주권 사상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초기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된다.

15) 이러한 구분은 《역사와 현실》 창간 기념 토론회 “한국 근대의 변혁 운동과 민족문제”(1989)에서 대체로 합의된 내용과 동일하다.

16) 신용하(1987a, 1987b), 이광린(1989), 강제언(1983) 등은 이 시기의 대립선을 ‘개화파, 척사유생 그리고 농민을 주축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세력 및 사대수구매관적 봉건왕조’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설정은 첫째, 개화파가 왕권에 의해 발탁되어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둘째, 개화파와 민중세력간의 첩예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대립을 무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동도서기론의 대표자인 박규수는 개화사상의 원조이기도 하다. 김운태(1990: 21)는 개화파가 주체성을 강조한 동도서기론으로 발전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이다.

윤리질서(東道)와 전통적 정치사회제도(東法)는 고수하고 서양의 군사기술·과학기술(西器)만 수용하자는 것을 그 핵심 이념으로 삼았다. 이 사상은 광무개혁을 통해 현실 적용을 시도하였다. 개화사상은 북학파의 실학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이미 1870년대에 많은 추종자를 확보하게 되었고, 갑신정변을 통해 현실적 적용에의 노력을 기울인다. 동도서기 사상과는 달리 서양의 정치·경제·사회제도(西法), 서양의 사회윤리 내지 기독교(西道)까지도 전면적으로 수용하려고 한 개화사상은 서구 문명을 조선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개화사상은 갑신정변·갑오경장·독립협회운동·애국계몽운동으로 이어져 나갔다.

동도서기파와 개화파는 동일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는 만큼 정치적으로 매우 친근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갈리게 된 것은 아관파천 이후 서구열강에 대한 이권 침탈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동도서기파가 왕조의 유지에 한층 더 관심을 두고 왕실에 이익이 되는 어느 나라에나 손을 뻗친 반면, 메이지유신을 개혁의 모델로 삼은 개화파는 지속적으로 일본에 의지하였다. 또 동도서기파가 유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면 개화파는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관료지배층의 민족문제 인식과 대응

구분	동도서기론	개화사상
주요운동	광무개혁	갑신정변·갑오경장·독립협회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	사회진화론
외세에 대한 태도	의존적	의존적
민중에 대한 태도	적대적	적대적
경제적 지향	봉건적 지주전호제도 유지	봉건적 지주전호제도 유지 (지주경영의 상업화·자본주의화)
정치적 지향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긍정적 사항	근대국가로의 전환노력	문명개화·부국강병을 위한 근대화노력
한계	왕권에 입각한 지배질서 유지	지배질서 유지를 통한 근대화, 주체성 부정

2) 재야유생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지주층으로 영남의 남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주와 안동지방의 유생들이 척사위정론의 세력이었다. 개항전후 이 재야 유생층의 현실 인식은 유교의 우주관, 세계관에 의한 “벽이단 승정학”(關異端崇正學), “존중화 양이적”(尊中華 攘夷狄)이라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1894년 이후 서양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그 기술문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들은 초기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내수외양론(內修外攘論)에 입각하여 봉건군주 복원을 꾀하였으나, 국권 침탈과 단발령 이후에는 의병투쟁과 만국공법을 통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문화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위정척사론을 기반으로 한 운동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의병투쟁이다. 의병투쟁은 단지 유생층만의 운동이 아니라 상층의 유생과 하층의 농민의 결합한 것으로, 명시적

으로는 봉건사상이, 잠재적으로는 반봉건사상이 함께 공존한다. 의병투쟁은 비록 봉건적 노선의 운동임에는 분명하나 반제국주의 운동을 철저히 펼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민중

근대 민중운동은 조선 후기부터 이어온 반봉건 운동의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개항 이후의 반제국주의 투쟁의 주체로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민중운동은 동학농민전쟁, 영학당 운동, 활빈당운동, 제주민란, 의병투쟁에의 결합, 만민공동회로의 결집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운동의 지속적인 목표는 반제·반봉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정권 장악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를 전진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지만,¹⁷⁾ 1910년대 이후에는 국외 무장투쟁(武裝鬪爭)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1920년대에는 적색노조나 적색농조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저항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운동의 주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각 운동세력의 시대 인식과 대응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각 세력의 민족문제 인식과 대응

구분	집권관료세력	재야유생	민중
기본사상	동도서기론·개화사상	중화사상에 입각한 위정척사론	반제·반봉건(유교·동학사상)
주권에 대한 태도	군주권의 인정	군주권의 인정	군주권의 인정
경제적 태도	지주전호관계의 유지	지주전호관계의 유지	지주전호관계의 폐지
외세에 대한 태도	외세를 통한 기존질서의 유지 및 근대화	중화사상에 입각한 외세배격	철저한 외세배격

<표 2>에서 보듯이 각 세력은 국민주권에 대한 제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의 민족운동은 민족형성에 있어서 국민주권 사상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매우 초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주권 이념을 제외한다면, 당시의 민족적 과제인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가장 철저히 수행했던 세력은 농민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3.2.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개: 3·1운동 이후¹⁸⁾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뚜렷한 성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화주의 사상이 정립되었다는 점이다. 3·1운동의 영향으로 형성된 임시정부가 그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재함”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국민주권 사상을 분명히 하였으며, 임시정부가 독립운동단체를 포괄하지 못하면서 등장한 참의부·정의부·신부 등 해외교포사회의 자치정부들이 국민주권주의와 공화주의의 원칙에 의해 운영된 것은 3·1운동 이후

17) 이러한 한계는 동학농민군이 대원군에게 지속적으로 의지했다는 사실을 통해 잘 드러난다.

18) 이 부분은 강만길(1982)에 주로 의존하였다.

국민주권에 입각한 공화주의가 명백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제의 점령에 대한 독립 운동은 결국 민족국가 수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족국가의 수립문제에 있어 우파와 좌파는 노선을 같이하면서, 때로는 노선을 달리하면서 공존의 노력을 보였다.

1) 좌파의 민족국가건설론

좌파의 민족국가건설론의 전개는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첫째, ‘협동전선’ 성립기, 둘째, 협동전선 와해기, 셋째, ‘연합전선’ 지향기이다.

협동전선 성립기에 있어 대표적인 운동은 1926년의 6·10만세운동과 1927년의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신간회(新刊會)운동이다. 이 운동의 중심세력이었던 조선공산당은 노농계급과 도시 소자본가 및 부르주아가 동맹하고 선거에 의해서 성립시킨 입법부가 권력의 최고기관이 되는 ‘민주공화국’ 건설을 독립운동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민주공화국론은 해외의 고려공산당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의한 ‘소비에트 정부’의 수립론과는 큰 차이를 갖는 것이었다. 조선공산당은 신간회를 발족시키면서 민주공화국 건설론에서 ‘노농대중의 민주주의적 집권자를 갖는 인민공화국’ 건설론으로 전환하는데 이는 공산당의 정치적 주도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다. 조선공산당은 당시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로 잡으면서도 부르주아 세력의 미약성 때문에 혁명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민공화국을 주장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좌파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의 친일화, 세계적 공황으로 인한 노동자·농민의 성장 그리고 조선공산당의 해체와 중국공산당으로의 편입에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민족적 협동전선’을 해체하고 중국공산당의 노선인 이립삼(李立三)의 ‘극좌맹동주의’를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민족국가 건설론도 ‘소비에트 건설론’으로 전환되었다. 이 노선은 ‘민족주의 좌파’와의 적대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독립운동노선을 극좌화시키고, 독립운동 전체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고립시켰다.

1930년대 후반 좌파독립운동은 ‘민족연합전선’을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었다. 1936에 조직된 만주의 ‘재만한인 조국광복회’, 1941년에 중국공산당의 지원 아래 건설된 연안의 ‘화북 조선청년연합회’와 그 후신인 ‘화북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국내의 공산당 재건 운동은 ‘소비에트 정권’이나 ‘노농독재 정권’을 지양하고 다시 ‘민족 부르주아지’와의 제휴를 전제로한 ‘민족연합전선’ 방식으로 나아갔으며, 특히 ‘조선독립동맹’은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2) 우파의 민족국가건설론

중국에서의 우익독립운동은 1930년대 전반기에 와서 민족혁명당과 한국국민당 계열로 정비되어 갔다. 1933년 성립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모태로 하는 민족혁명당은 민족국가의 건설을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에 기초를 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하여 삼균주의(三均主義)적 국가건설론을 제시하고 있다.

민족혁명당의 성립에 반발하여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파가 1935년에 결성한 한국국민당도 ‘정치·경제 및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는 신민주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화로 하여 국민의 생활권을 평등하게 할 것’을 채택함으로써 민족혁명당과 동일한 민족국가건설론을 주장했다.

1930년대 중엽 이후에 중국의 독립운동은 연합전선을 표방하며 민족혁명당과 한국국민당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갔는데 민족혁명당은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한국국민당은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로 일단 통일되었다가 1939년에는 ‘연합전선’을 완성하여 ‘전국 연합전선협회’를 성립시켰다. 이 연합전선은 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삼균주의에 입각하였다.

4. 민족국가 건설의 좌절과 분단

일제시기 항일 독립운동은 민족운동의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도 국민주권 사상에 입각한 민주공화국론을 정립함으로써 한민족의 민족형성에 있어 진일보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론으로의 전 운동세력의 일정 정도의 합의는 민족형성의 객관적 요인에 더하여 주관적 요인이 확보된 것으로, 이 시점에서 한국민족의 형성은 민족국가의 건설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만을 남겨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 허락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일 한민족 스스로의 독립이 가능하였다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민족은 통일된 민족국가를 형성함으로써 민족형성을 완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은 강대국에 의해 주어졌고, 그것도 분할점령이라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해방 국면에 있어서 분단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소간의 냉전체제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소에 의한 분할점령과 미·소간의 냉전체제의 확립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 한민족이 냉철하게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통일 민족국가 건설 노력을 단일하게 전개했었다면 분단체제의 형성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 민족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는 여전히 반제·반봉건으로, 새롭게 한반도를 점령한 세력의 성격 규정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제국주의 과제로서의 친일부역자(親日附逆者)의 처단과 반봉건의 과제로서의 토지개혁은 민족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미완의 난제로 남아 있었다. <표 3>에서 보듯이, 이승만·한국민주당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은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방지하기 위해 극우세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이러한 선결과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었다. 미군정과의 제휴에 힘입은 극우세력은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김일성·북조선노동당 계열은 민주기치론에 입각하여 북한에서의 단독정부수립에 착수하였다. 결국 미국과 소련의 힘을 등에 업은 이승만·한민당 계열과 김일성·북로당 계열이 남한과 북한에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나머지 세력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민족운동의 입장에서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현상은 좌우합작운동의 전개이다. 중도좌파의 여운형과 중도우파의 김규식에 의해 추진된 좌우합작운동은 일제하 독립운동의 ‘연합전선’의 재현으로 통일민족국가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 운동의 실패는 결국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격화를 가져오고, 단독정부의 수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있어 국내 정치세력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여러 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반탁노선을 들 수 있겠다. 당시의 국제정세속에서 신탁통치안은 실질적인 통일 민족국가 수립의 유일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구 등에 의한 반탁운동의 전개는 국제정세에 대한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해방 후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3년만에 남북한 양측에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고, 단독정부의 수립에 의한 분단은 6·

25를 통해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졌다. 대규모의 동족상잔으로 끝난 한국전쟁은 양측에 엄청난 피해를 낳아 양측간의 적대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1945년 8·15 해방에서 분단에 이르는 기간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성을 통해 한민족의 형성을 완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미·소간의 냉전이라는 대외적 요인과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는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완전한 민족국가 건설은 유예되어 차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표 3> 해방 후 정치세력의 쟁점별 지향

쟁점	정치세력 이승만· 한민당 계열	김구· 한독당· 입정 계열	건준· 여운형· 인민당 계열	박헌영· 조선공산당· 남로당 계열	김일성· 북로당 계열 (김두봉· 신민당 계열 포함)
일제시대 경력	친일파·민족 반역자·일제 수혜계급 또는 소극적 민족해방 운동세력	민족해방 운동세력	민족해방 운동세력	민족해방운동세력	민족해방 운동세력
식민지 경제구조의 변혁 (토지개혁)	소극적 변혁 (사실상 반대 또는 다수가 그 대상)	소극적 변혁 유상매상, 유상분배	적극적 변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적극적 변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적극적 변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수립될 정권의 성격	부르주아 정권	부르주아 정권과 인민정권의 혼합적 성격	인민정권	인민정권	인민정권
모스크바3상회의	정치적 반공 반탁운동	정의적 반공 반탁운동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지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지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지지
일제잔재 청산과 친일파 처단	소극적 찬성, 사실상의 반대 또는 대다수가 친일파 자체	전면 청산	전면 청산	전면 청산	전면 청산
통일문제	단정세력	통일운동세력	통일운동세력	통일운동 세력	통일운동세력 (민주기지론)
이념적 지향	우	우	좌	좌	좌

자료: 박명림, 1989.

다음 장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맥락에서, 즉 새로운 형태의 국제 정치경제 체제에 의해 민족분단의 모순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한 발 앞서 재통일을 이룬 독일·베트남·예멘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민족형성, 통일된 근대국가 건설에 있어서 한국사회에 어떠한 함의를 줄 것인가를 찾아보기로 한다.

제 4 장 독일, 베트남 및 예멘의 분단과 통일과정 비교분석

1. 분단국가 체제의 성립과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국가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중국과 독일·베트남·예멘이 있다. 이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청산과정에서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냉전체제의 구축에 따라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에서 각국이 차지하였던 위상은 매우 상이하다. 우선 산업화의 정도를 보면, 독일은 선진공업국이었지만 나머지 국가는 모두 후진적 상태를 면하지 못한 상태였다. 월러스틴(Wallerstein, 1974)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일은 중심부 국가였고 나머지는 주변부 국가였다. 독일은 영국에 비하여 산업화가 늦었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하나로, 1870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독일제국의 형태로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성공하였다.¹⁹⁾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서구가 민족의 이름으로 자행한 제국주의 정책의 희생물이 되어 식민지(한국·예멘·베트남) 또는 반식민지(중국)로 전락함에 따라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에 실패하였다.²⁰⁾ 따라서 이 나라들에게 근대 민족국가의 수립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를 견지하였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패전 결과로 인해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국에 의하여 분할 점령된 것이 동서분단으로 이어졌으나, 한국·베트남·예멘은 각각 일본·프랑스·오스만투르크/영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한국·베트남·예멘은 각각 저항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이 나라들에서 독립은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하였다기보다는 변화된 국제정세에 따라 주어진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각각 남북으로 분단된 '1민족 2국가 체제'가 성립되었다.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토대는 마련하였으나, 만주와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로 되면서 반식민지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중국에서는 국민당(國民黨) 정부가 계속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1946년 7월부터 1949년 9월까지 국공내전(國共內戰)이 진행되었다. 내전의 결과 모택동(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하여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패배한 국민당의 장개석(蔣介石) 정부가 대만으로 도피함으로써 분단된 것인데, 앞서 언급한 나라들과는 분단의 원인과 성격에서 현격한 차이점이 있다.

19) 통일 독일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로 변질되었다. 빌헬름1세와 히틀러는 양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이었다. 특히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zialismus: 나치즘)를 독일 민족의식으로 표방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왜곡시켰다. 대외 팽창주의 성향을 갖는 나치즘의 민족주의는 불완전한 정치적 현실 대신 민족의 완전성이 대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국가규범을 초월하는 준종교적인 민족에 대한 관점이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이비종교적 도착증세를 보이는 팽창주의적 인종차별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었으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독일 민족주의의 특징이었다.

20) 식민지 지배하 이 나라들에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독립을 추구하려는 저항 민족주의, 민족독립운동의 형태를 띠었다.

한편, 한국·독일·베트남·중국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청산과정에 그 원인이 존재하지만, 예멘의 분단은 전후 구축된 좌우 이데올로기가 극심하게 대립하였던 냉전체제와 영국 식민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체제 분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각국 내부의 요인이 발견되기도 한다. 분단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부가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프랑스 식민 통치하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지역적·계급적으로 심화되어 온 베트남 사회의 갈등구조가 바탕이 되었고,²¹⁾ 예멘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북예멘과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수탈을 계속 당한 남예멘 사이의 지역적 격차로부터 비롯된 갈등구조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게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갈등구조가 분단으로 직결될 만큼 크지는 않았다. 독일과 한국에서는 그 지역을 점령한 국가에 의하여 분단선이 그어졌고, 중국에서 대만은 국민당 정부의 피난지였을 뿐이다.

요컨대,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향한 민족주의적 열망은 제2차 세계대전 청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냉전체제에 의하여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45년 독일, 1948년 한국, 1949년 중국, 1955년 베트남, 1967년 예멘의 순으로 차례로 한 민족이 두 개의 국가를 갖는 분단국가체제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각국이 비슷한 요인에 의하여 분단되었지만, 그 시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까닭은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요인, 국내 정치적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제2차 대전에서 해당 국가 혹은 그 식민모국의 승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발견된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1945년에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4개국에 의하여 분할 점령된 것이 분단으로 이어졌다. 독일의 분단은 알타협정(1945년 2월)에서 합의되었고, 포츠담선언(1945년 7월)으로 확정되었으며, 전후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잠정 조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서방국가들과 소련은 독일에 대한 전후처리과정에서 점차 그 방법에 대하여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되고 중국에는 대립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독일의 분단은 사실상 고정화되었다. 어쨌든 독일의 독일의 분단은 연합국에 의하여 의도된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 열강들간의 명시적 합의가 존재한다.

한국과 중국의 분단은 그 식민모국 혹은 반식민모국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여 물러난 후에 전개된 시대 배경을 깔고 있다. 한국에서는 1945년에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명분으로 남북을 각각 분할하여 점령하였고, 1948년에 남북한에서 별개의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분단체제가 성립되었다.²²⁾ 이처럼 한국의 분단도 독일처럼

21) 프랑스 식민 정부의 분할지배(divide and rule) 정책에 의하여 베트남은 식민속령인 코친차이나(남부의 메콩델타지역), 직접보호령인 톤킨(북부지역), 황제에 의하여 통치되는 간접보호령인 안남(중부)으로 삼분되어 왔으며, 이 지역간에는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상의 격차가 있었다. 프랑스의 베트남 진출은 이들 지역의 차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차별성은 또 다시 역으로 프랑스의 진출과정 및 식민지 정책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또 프랑스 식민정부는 베트남 사회의 계급갈등을 이용하였다. 식민정부는 왕조·토착세력·카톨릭·지주·매관세력 등 봉건지배세력에게는 우호적으로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반면, 민중의 정치참여는 봉쇄하여 양자간의 대립을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지역적·계급적 차별성은 농민들의 생활을 바꾸지는 못했으나,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트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미국에 의해서 조종되는 신식민지 정권인 남베트남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었다(김국신·김도태·여인곤·황병덕, 1994b: 25~26; 전경수, 1994: 127).

22) 미소 양국 군대의 한반도 진주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카이로선언(1943년 11월)·알타협정(1945년 2월)·포츠담선언(1945년 7월)·모스크바3상회의(1945년 12월) 등에서 국제정치적으로 “적

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북위 38도선을 긋기로 한 협정이 애초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독일의 분단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²³⁾ 중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1946년부터 장개석의 국민당군과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군이 국공내전을 벌였고, 그 결과 1949년 이후 2개의 정부를 갖는 현재의 체제가 성립되었다.²⁴⁾

이와 대조적으로, 베트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립이 늦어졌다. 1945년에 독립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독일에 의하여 프랑스가 받은 치욕적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베트남이 프랑스의 속령으로 남도록 협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독립동맹회(북베트남)는 프랑스 식민정부를 상대로 1946년 12월 독립전쟁을 개시하였는데, 이는 외세에 대한 베트남 민중의 민족해방전쟁이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프랑스는 1949년에 꼭두각시 정권으로 베트남(남베트남의 전신)을 수립하여, 전쟁의 성격을 내전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

그 후 1954년 베트남은 제네바협정에 의하여 북위 17도선에서 남북이 분단되었다. 이 협정은 그 때까지 지속된 베트남독립전쟁의 결과였다. 제네바회의는 그 전쟁의 현실적 전세를 반영하여 교전 당사자인 남북 베트남 쌍방이 수락할 수 있는 휴전안을 협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베트남 분단의 원인이 내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김학준, 1979). 하지만, 그 내전이 프랑스의 꼭두각시 정권과 민족해방세력의 전쟁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남북 베트남의 분단은 미국이 제안한 유럽 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에 대하여 프랑스가 간섭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국이 프랑스의 ‘베트남 고민’을 떠맡는 대리자의 역할을 맡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현실 국제정치의 희생물이었다(전경수, 1994). 베트남의 독립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분단된 배경에는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다는 점과 아울러, 베트남 민족해방세력이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²⁵⁾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은 중국과 함께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예멘은 오래 동안 독립 왕국을 유지해 왔으나, 1517년부터 1918년까지 오스만투르크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예멘은 사막과 산악지대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의 오지였으므로, 오스만투르크의 식민지배 하에서도 부족들에 의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영국은 1799년에 남예멘 아덴항 외곽에 있는 페림 섬을 장악하였고, 1839년에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덴을 정복하였다.²⁶⁾ 이 때부터 아덴을 중심으로 하

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라는 약속과 분할 점령이 합의되었다.

23) 1945년 2월 8일 개최된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처칠·스탈린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한을 분할점령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그러나, 독일에 대한 분할 점령을 확정된 1945년 7월 포츠담선언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적당한 시기”에 보장하겠다고 밝혔지, 남북한 분할점령에 대해서는 합의하지도 확정하지도 않았다.

24)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는 아니었다. 다만 대만과 만주가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반식민지적 특성이 존재하였다.

25) 전경수(1994)는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는 외세가 자본주의 노선을 걷고 있었으므로, 베트남 민족주의는 그에 대한 이념적 저항의 기초로 사회주의를 선택하였다”고 해석한다.

26) 아덴항은 인도양과 홍해를 연결하는 발엘만데브 해협을 낀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이후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아덴을 영국과 인도간을 왕래하는 선박을 위한 석탄 중간공급지로 이용하였고, 1869년에 수에즈운하가 개통

는 남예멘은 영국의 인도식민지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사나를 중심으로 하는 북예멘은 오스만투르크의 식민지로 분단되었다.

오스만투르크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패배하였다. 1918년 무드로스휴전조약에 의해 오스만투르크가 물러나게 되자, 예멘 전역은 영국의 지배하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북예멘 지역에서는 자이디의 족장 이맘 야히야가 회교군주국을 건설하여, 영국을 상대로 치열한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1934년 사나를 중심으로 독립한 북예멘은 아덴을 포함하는 영국 식민지 남예멘까지도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남예멘과는 별개의 독립체제를 유지하였다. 남예멘은 1937년에 영국의 직접 식민지가 되었고 총독이 임명되었다. 북예멘의 독립은 민족주의를 자극하였고, 그 여파로 남예멘에서는 반영운동(反英運動)이 활발히 일어났다. 영국은 민족주의 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예멘을 통일아랍술탄국이라는 연방으로 구성하였고, 1962년에는 남아라비아연방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할 때에도, 영국이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남예멘은 여전히 식민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북예멘에서는 1962년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왕정을 철폐하고 예멘아랍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또, 강화된 민족주의 열기를 바탕으로 남예멘 민족주의 세력은 반영 무력항쟁을 계속하여, 마침내 1967년 11월에 영국을 축출하고 예멘인민민주공화국(남예멘)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남예멘의 영국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통일 예멘의 건설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남예멘은 독립 당시에는 중도세력이 집권하였으나, 1969년에 쿠데타가 발생하여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점점 좌경화되어 1990년 통일 직전까지 아랍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였다. 북예멘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정치적으로는 비동맹 중립정책을 표방해 온 보수 이슬람 국가였으나, 남예멘은 소련의 원조를 받았던 사회주의 국가였다. 그런데 실제 예멘 국민들의 삶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다. 부족단위로 흩어져 살면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점은 동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좌우 이데올로기의 극심한 대립은 당시 국제사회를 지배하였던 냉전체제의 표출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독일·중국과는 달리 한국·베트남·예멘의 남북분할은 식민주의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간섭에 의하여 민족자존을 상실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지역에 강대국의 간섭이 강하였던 것은 그 나라들이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반대편 진출을 위한 기지(한국), 중국 사회주의와 미국 자본주의 대립의 최전선(베트남), 인도양과 홍해의 중간 경유지(예멘)라는 이 지역들의 지정학적 특성은 어느 한편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단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족해방의 논리, 즉 민족주의가 분단체제 극복의 원동력으로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 분단국가 체제의 지속과 극복

분단국가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힘 겨루기의

되고 그 후 걸프지역에서 대량의 석유가 발견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결과로 나타난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었다. 동서 대결은 분단국가 체제를 성립시킨 기본 요인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유지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두 진영의 대표자 격인 미국과 소련은 분단국의 각기 한편과 동맹국 관계를 맺고 후원을 담당하였다. 미국과 남한·서독·남베트남·북예멘·대만, 그리고 소련과 북한·동독·북베트남·남예멘·중국의 관계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하나씩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후반의 중소분쟁 이후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대립관계로 변모하였고, 1970년대 초 미중수교는 미국과 대만간의 국교단절을 의미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분단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이 있다. 대만의 장개석 정권은 국공내전에서 패배·도주하여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970년대 초의 국제정세 변화가 곧바로 중국의 통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페레스트로이카와 동서 냉전 종식은 1990년에 독일과 예멘의 통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기본 여건을 제공하였다.

각국 내부에서 추동되었던 민족주의적 열망은 분단체제를 종식하고 통일을 가능케 하는 방향의 힘으로 작용하였다. 베트남에서는 민중의 끊임없는 동원에 의하여 미국이 참전하였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 동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민족간의 상호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통일에 필요한 자체 준비작업을 하면서 민족자결 역량을 꾸준히 길러 왔으며, 그리고 남북예멘은 잦은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상호 이해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중국과 대만은 대만자본의 본토투자를 허용하고, 상호 이산가족 방문을 허용하는 등 나름대로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통일을 향한 민족적 열망은 큰 데 비하여 가시적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분단국가 체제 형성과 유지의 구심력은 냉전체제요, 원심력은 민족주의이다. 분단국가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고 또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컸었고 크기 때문이다.

분단국가 체제가 유지되었던 시기에 분단 양국간의 관계는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근대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베트남·예멘·중국은 새로 건설하려는 근대 민족국가의 이념체계의 균열·반목이 분단으로 이어졌는데, 정치세력간 대립·갈등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 반면 분단 전에 이미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성공한 독일은 정치적 근대화를 완수한 세계 열강 중의 하나였지만, 전승국에 의하여 분할 점령된 것이었다. 이러한 분단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여, 동서독은 경쟁적 대립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남북베트남, 중국과 대만은 적대적 대립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지루한 전쟁을 수행하였다. 남북 예멘은 국경지역에서 잦은 소규모 전투가 발생하였고, 그 전투의 수습을 위하여 아랍지역의 UN격인 아랍동맹의 중재로 정치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음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계속 넓혀 올 수 있었다. 남북 예멘은 상호 적대와 협력을 반복해 왔다.

대체로 이러한 분단 양국간의 관계가 교류·협력의 양상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서독은 체제경쟁관계 속에서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강도 높은 인적·물적 상호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예멘에서도 어느 정도나마 교류가 있었다. 국경 개방으로 인하여 비공식적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고, 간헐적으로나마 공식적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들어 대만 자본의 중국 투자가 허용되고 이산가족의 방문이 허용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과, 전쟁 중의 남북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⁷⁾

분단국가 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이념을 기반으로 유지되었다. 분단 양국간의 체제 이질성은 매우 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남북 예멘은 겉으로는 사회주의·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실제 국민들의 생활은 이슬람교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이질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발전의 격차는 동서독의 경우 분단체제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꽤 심각해졌다. 동서독의 이러한 발전 격차는 체제간 이질성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형성하였다. 커다란 발전격차의 존재는 어느 한쪽에 의한 다른 한쪽의 흡수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반해, 발전격차가 존재하지 않고 분단 양국이 거의 동등한 힘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통일을 향한 민족주의적 열망이 강한 경우 전쟁이 발생하였다. 베트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기간에 걸친 힘 겨루기 끝에 전쟁은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났다. 베트남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 것은 양국의 발전격차가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이었다.²⁸⁾ 북베트남은 반제국주의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외세 의존적인 남베트남에 대하여 민족의 주도권을 획득하였다. 남북예멘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견지하였던 북예멘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였던 남예멘보다 좀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예멘에서는 아랍동맹의 중재에 의한 잦은 남북간의 정치적 협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통일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국경지대에서 발견된 유전의 공동개발이라는 산업적 요구와 사회주의권의 경제원조가 중단된 남예멘의 경제적 위기상황이었다. 산업발전을 통한 상호 공존공영의 길을 추구한 결과가 분단체제의 종결을 낳았다. 중국과 대만은 국민 1인당 GNP에서는 대만이 중국을 훨씬 앞서고 있으나, 인구를 고려하면 전체 규모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1971년 중국이 대만을 밀어내고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자리잡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힘 관계의 역전은 심화되어 왔다. 남북한의 경우 분단 당시에는 경제력 격차가 거의 없었으나, 1980년대 이후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인 면에서 압도하여 왔다.

분단체제의 형성, 지속 및 극복과정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것으로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다. 분단 양국간 전쟁 경험 여부와 그 성격 및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동서독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동서독은 전쟁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호 경쟁적 대립·협력의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점은 평화통일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1964년 이후 격렬한 전쟁을 치렀다. 그 전쟁은 남북베트남간의 내전으로 시작해서 미국의 참전에 따라 국제전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이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하여 1973년에 철수한 이후, 전쟁의 성격은 내전으로 변모하였고, 마침내 1975년에 종결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전쟁은 “죽기 아니면 살기”의 형태로 전개되어,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무력으로 정복하게 되었다. 동족상잔(fratricidal war)을 통한 무력통일 유형이다. 남북 예멘은 베트남전쟁과 같은 대규모 유혈전쟁을 하지는 않았으나,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 전투는 남북 예멘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본 요인이 되었다. 예멘에서는 아랍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었던 국제기구인 아랍동맹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로써 동족의 대량 살상을 동반한 전쟁은 지속적으로 억제되었다. 1946~1949년 중국내전은 분단체제를 성립시킨 요인이었고, 1950~1953년 한국전쟁은 38선을 휴전선으로 대치하면서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중국에서의

27)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한 간에도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8) 남베트남은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인 경제발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의해 야기된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국공내전은 정권 장악을 둘러싼 내전이었으나,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참전을 동반한 국제전으로 확산되었고 약 4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한국전쟁은 냉전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종결되었고, 남북한의 분단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분단 극복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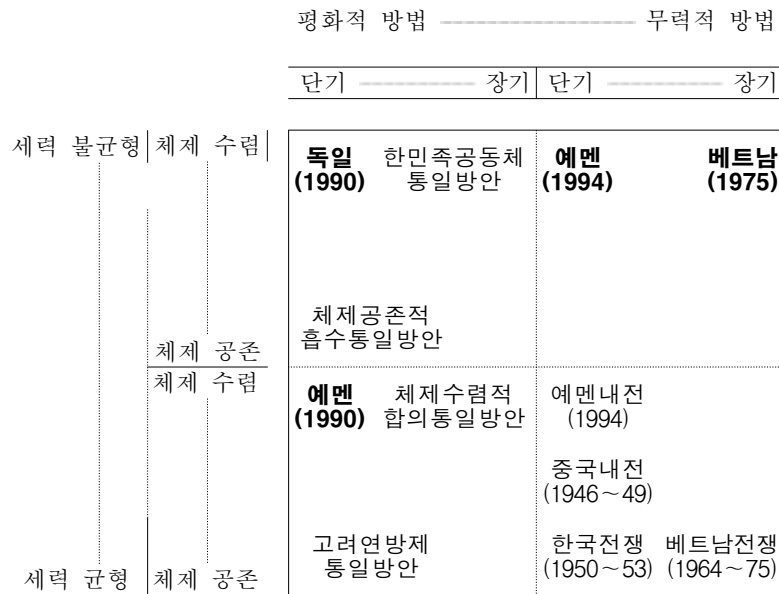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이 통일된 사례는 베트남(1975년), 독일(1990년), 예멘(1990년, 1994년)이 있고, 남북한과 중국-대만은 아직까지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분단 양국의 세력관계와 통일방법, 체제형태·소요기간을 네 축으로 하여 <그림 2>와 같은 통일의 유형론을 구성할 수 있다. 먼저 독일 통일은 극단적 세력불균형에 의한 평화적 통일, 즉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absorption)이다. 독일 통일은 단기간에 급속히 이루어졌고, 통일 후에 건설된 국가체제는 서독의 것에 수렴하였다. 다음, 1990년 예멘의 통일은 어느 정도의 세력균형을 유지한 평화적 통일, 남북 예멘 정부의 협상(negotiation)과 합의(agreement)의 결과이다. 통일 헌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었는데, 시행되지 않다가 갑자기 시행되었다. 단기간에 급속히 통일이 이루어졌다. 통일 예멘은 자본주의 체제를 견지함으로써 북예멘의 체제에 수렴하였다. 그러나, 1994년 예멘 내전 이후의 재통일은 무력통일, 즉 북예멘의 남예멘 정복(subjugation)이었다. 재통일은 단기간에 급속히 달성되었고, 북예멘이 남예멘에 자기 체제를 한층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즉 북예멘으로의 체제수렴 강도가 강화된 것이다.

정복통일은 양국간의 세력 불균형과 무력적 방법의 동원으로 정의되는데, 1975년 베트남 통일은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 통일은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통하여 달성되었고,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로 수렴되었다.

그런데, 분단 양국간의 세력 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무력적 방법으로 통일을 시도하면 전쟁이 발생하고 계속 지속된다. 몇 개월간 지속된 예멘 내전과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한국전쟁과 중국내전,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베트남전쟁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은 어느 한쪽 체제로의 수렴이나 공존의 축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 다만 서로를 적으로 삼고 대치하는 형국이 지속될 뿐이다.

독일·베트남·예멘은 각기 통일을 이룬 후 새로운 통일국가 건설에 착수하였다.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체제는 통일 과정을 정확히 반영한다. 독일은 서독에 의하여 흡수통일되었으므로 자유민주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였다. 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한 무력정복통일이었으므로 사회주의·명령성 계획경제를 토대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였다. 예멘은 평등한 관계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을 주도한 것은 북예멘이었다. 남예멘은 북예멘을 따라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수용하였다. 그러면서 공통의 문화적 배경인 이슬람공화국을 천명하였다. 예멘의 통일 유형은 실질적으로는 북예멘의 흡수통일 형태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형식상으로는 비례대표 유형이며 일방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변화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상이 현실에서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다. 정치적 통합의 어려움, 경제적 침체, 그리고 새로운 사회통합의 과제는 1994년 분단과 내전, 재통일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그것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희생을 동반하였다.

<그림 2> 통일의 유형론: 세력관계와 통일방법을 중심으로



이제는 통일을 이룬 세 나라의 통일 과정을, 분단 양국간의 세력관계의 변화, 통일 후 건설한 국가의 체제, 동원하였던 통일방법 및 소요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통일이 각국에서 갖는 의미를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천착하고자 한다.

3.1. 독일

독일 민족은 비록 이데올로기와 강대국의 강압 때문에 동서로 분단되어 살았지만, 꾸준히 여러 방면의 교류를 통하여 분단의 고통을 일부나마 줄이려고 노력해 왔다. 독일은 1990년 마침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 통일은 서독 정부의 강압이나 동독 정부·공산당의 강요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즉, 독일 통일은 동독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자유의사로 선택한 결과였다. 동독인들의 서독 편입 요구는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탄압과 빈곤, 그리고 서독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기인하였다. 독일에서 평화통일이 가능하였던 기본적 요인은 냉전체제의 해소와 체제간의 발전격차였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하여 서독에 유리하게 조성된 국제 정세는 통일이 가능했던 외부적 요인이었고, 서독이 동독에 대하여 체제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정치·경제·사회체제에서 절대 우위를 견지하였다는 점은 통일의 내부적 요인이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을 낳은 원동력은 발달된 서독의 자본주의였고, 그 주체는 자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었으므로 정치적 통합의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군대를 포함한 동독 국가기구를 해체하여 권력구조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방체제 하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지방정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동독주민들이 정치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

나, 동서독의 발전격차와 정책상의 오류로 인하여 실업·물가양등·주택부족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통일 독일 정부는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²⁹⁾ 또, 동독 출신 일부 주민들은 아직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일부 청소년층에서는 국수주의적 신나치운동이 전개되는 등(Brune et al., 1993) 여러 가지 사회통합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3.2. 베트남

베트남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민족해방이었다.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것이 베트남 전쟁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 통일의 원동력은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반외세 민족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 운동의 실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62년에 남베트남에서 조직된 민족해방전선이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대하여 정치적·정신적·군사적 후견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미군에 대항하여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베트남전쟁은 남베트남 내전으로부터 시작되어 미국과 북베트남의 참전으로 확대된 경우인데, 남베트남 내부의 사정과 미국과 사회주의 세력의 전쟁수행 능력이 모두 함께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의 미국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 정부군이 패배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베트남전쟁이 미군으로 대표되는 군사력의 우열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았고, 사회주의 세력의 전쟁수행능력과 남베트남 주민의 여론 방향이 전쟁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³⁰⁾ 이처럼 베트남 통일을 주도하였던 것은 민족주의에 의하여 추동된 사회 성원들의 끊임없는 동원체제였다. 즉 베트남 통일의 주역은 사회였다.

베트남의 통일방식은 세력불균형에 기반하여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정복하였으므로, 정치적 통합의 문제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북베트남 출신이 남베트남 지역에 대한 통치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정책 운영상의 일관성은 유지할 수 있었다. 통일 초기 남부 지방에서는 구 남베트남 출신자에게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었다.³¹⁾ 한편, 남북 베트남의 경제

29) 통일비용은 경제적 격차에 따른 투자재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30) 남베트남 정부는 비민주적인 정치로 말미암아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였다. 남베트남의 정치지도자들은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것이 아니라 군부쿠데타로 집권하였고, 군부지도자들은 프랑스 식민통치에 협조한 프랑스군 장교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반민주적 토지개혁은 주민간 부의 불평등 분배를 더욱 심화시켰다. 아울러, 미국의 지원과 개입도 국민의 정서 이반을 부추겼다. 오랜 식민통치를 경험한 주민들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강하게 띠었는데, 그들은 미국의 개입을 식민제국주의의 진출로 이해하였다. 미국의 지원은 남베트남 정부의 정당성을 크게 해쳤다. 그 결과 주민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표방한 공산주의자들에 적극 협조하게 되었다.

31) 통일 베트남이 시도한 정책은 여러 단계의 변천을 겪었다. 1976~1980년에는 북부에서 시행하였던 구체제 하의 경제운영 방식을 남부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1980~1986년에는 베트남 전역에서 농업생산에 계약제를 도입하고, 산업에 기업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요체로 하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며, 1986~1990년에는 소유권 형태의 다양화, 인센티브제 도입, 그리고 개방경제정책을 천명하였다. 1990년 이후에는 개방경제화가 한층더 가속화되고 있다.

적 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통일비용 부담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성장을 추진할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다. 또한, 남베트남 지역주민이 사회주의 정권으로부터 받은 사회적·심리적 고통과 삶의 대가는 매우 컸다. 남베트남에는 1954년 제네바협정 이후 서방세계로부터 유입된 자본주의적 문화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정치경제적 요인이 잔존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자본주의에 몰두했던 남베트남을 사회주의화하기 위하여 사상교육에 몰두하였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자 실시된 교육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강도는 엄청났을 것이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교육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의 방법과 수단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베트남 주민의 사회적 통합은 이루어졌다.

3.3. 예멘

예멘에서는 이념 및 체제간의 갈등 정도는 이슬람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이 확보됨으로써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예멘은 이슬람공화국이라는 공통 분모하에서 합의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였다. 구체적 경과를 살펴보면, 북예멘은 1918년 정부 수립 이후 남예멘이 자국의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해 왔다. 남예멘이 196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양 예멘 정부는 통일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이 협상은 당시 국제정세를 지배하였던 냉전체제의 존재와 양국의 국내정치적 갈등 및 국경지역에서의 산발적인 무력충돌로 인하여 중단되곤 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북 예멘의 국경분쟁으로 인한 전쟁분위기 속에서 이웃 아랍국가들과 아랍연맹의 조정으로 인하여 양 예멘 정부는 통일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또 1980년 이후 양국 국민의 상호자유왕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교류가 촉진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아울러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따라 남예멘 정부에게 제공되던 원조가 끊겼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남예멘 정부가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통일에 방해가 되는 냉전체제가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1988년 남북예멘 정부는 국경지대에서 발견된 유전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양국이 중립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남예멘 정부는 통일을 이룸으로써 서방의 외자 및 기술도입으로 석유자원을 개발하고 아덴 자유항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통일은 양 예멘의 공존공영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이 민족주의라는 의식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었다. 1990년 예멘 통일의 원동력은 산업이었다.

예멘 통일은 두 개의 정부가 상호의 국력에 비례하여 통합정부의 권력을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북예멘이 인구와 경제수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단순 수치로 계산되는 비율보다 훨씬 많은 보직을 남예멘에 제공하였다.³²⁾ 양측 국력의 지분을 통일정부 권력구성에 반영시킨 비례대표 유형을 견지하였다. 북예멘이 통일정부를 주도하되 남예멘도 무시하지 못할 견제세력의 지위를 보장받았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 예멘의 모든 기존 기구들은 그대로 둔 채 중앙기구만을 만들어 연방식으로 관장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중앙기구에서는 각 보직의 정·부 책임자를 각각 북예멘·남예멘 출신이 맡았

32) 1990년 통일 당시 국토 면적은 남예멘이 북예멘보다 약 1.7배 정도 컸지만(336,869km² ; 195,000 km²), 인구와 1인당국민소득 및 군사력은 북예멘이 남예멘의 각각 3.9배(240만명 : 927만명), 1.4배(\$420 : \$580), 1.3배(27,500명 : 38,500명)로 우세하였다(서재만, 1994).

다.

그러나, 예멘 통일 정부의 요직 분배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상의 비능률을 극복할 수 없었다. 더욱이 군·경찰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구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도 못하였다. 조직 운영 과정에서 남예멘 출신 엘리트의 배제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 1993년 4·27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국민회의당(북예멘)과 예멘사회당(남예멘)간의 연정체제에 균열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총선 후 북예멘출신으로 남예멘 사회주의 정권과의 통일을 반대했던 재야정치세력인 예멘개혁당이 62석을 얻어 제2당으로 부상하면서, 56석을 얻은 예멘사회당은 제3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³³⁾ 당초 예멘사회당은 중앙정부와 부족사회간의 전통적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북예멘에서 조직력을 활용하여 그 세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러한 기대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남예멘 지역에서 사유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예멘 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이질적 체제간의 통합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통일정부의 경제계획 능력의 취약성과 자본과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대외종속과 저성장의 악순환이 더 큰 문제이다. 연간 100%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걸프전 당시 친이라크 노선을 취한 데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보복조치로서 취해진 예멘인 노동자 송환과 경제원조 중단 등은 경제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통일 이전 남북예멘 사회는 전반적으로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의 기본 원리가 이슬람교라는 점에 대하여 남예멘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영국 식민지 경험으로 개방되어 있었고, 사회주의적 평등의식을 알고 있는 남예멘 주민들에게 문화적 충격은 매우 컸다. 이슬람교의 교리상 음주는 금지되었고, 남녀불평등이 통용되면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으며, 무기소지도 허용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갈등은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다.

요컨대, 통일 정부의 무기력 현상의 원인은 정부구성이 기계적인 권력배분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이 어렵고, 행정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징계가 곤란하여 위계질서가 이완되었다. 정권유지에 필수적인 군과 경찰마저 실질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착 부족세력들도 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치폭력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다. 또한, 국제정세의 오판에 따라 초래된 경제적 위기 때문에 주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하여 갔다. 이러한 상황은 남예멘 출신 엘리트의 불만을 가중시켜 남예멘 수뇌부는 아덴으로 복귀하였다. 1994년 예멘 내전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북예멘 정부는 남예멘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재통일은 합의통일이 아니라 무력통일이었다. 무력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은 그전보다 더욱 힘들게 되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분단국가의 형성, 지속 및 극복 과정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³⁴⁾

33) 그 요인으로는 북예멘의 인구가 남예멘의 3.9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34)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교 방법은 맥락의 대조(comparison of context)이다. 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그 전후관계(timing and sequence)를 비교하는 것으로, 각 사회가 갖는 역사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함으로써, 그 분단과 통일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 분단국가의 형성, 지속 및 극복 과정의 비교

변수	국가	한국·북한	독일	베트남	예멘	중국·대만
분단국가 형성						
제2차세계대전 영향		○	○	○	×	○
냉전체제 구축		○	○	○	○	○
식민지 경험		○	×	○	○	△
식민 모국		일본	-	프랑스	오스만투르크·영국	일본
사회적 갈등구조		-	-	지역·계급	지역	-
분단국가 지속						
체제분단기간		1948~현재	1945~90	1955~75	1967~90	1949~현재
냉전체제 유지		○	○	○	○	○
민족의식 존재		○	○	○	○	○
양국관계		적대적 대립	경쟁적 대립·협력	적대적 대립	적대·협력 반복	적대적 대립
교류·협력		실행이 안됨	원활히 추진	실행이 안됨	간헐적 정치협상	자본투자·이산가족 방문
체제간 이질성		매우 큼	매우 큼	매우 큼	약함	매우 큼
발전격차		매우 큼	매우 큼	거의 없음	약간 있음	매우 큼
전쟁 경험		○	×	○	△	○
전쟁 기간		1950~53	-	1964~75	간헐적	1946~49
전쟁 유형		국제전/내전	-	국제전/내전	소규모 전투	내전
주요 참전국		미국, 중국	-	미국	-	-
전쟁의 의미		분단의 고착화	-	통일의 완수	통일협상 계기	분단의 시작
분단국가 극복						
통일완수 여부		×	○	○	○	×
통일요인		-	체제발전격차, 정당성	체제의 정당성	외적·경제적 환경	-
통일방식		-	평화적 흡수	무력적 흡수	합의/무력적 흡수	-
통일주도세력		-	자본	사회	산업	-
통일내전 시기		-	-	1973~75	1994	-
통일 후 체제		-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
통일후 문제점						
정치		-	없음	거의 없음	무력대결	-
경제		-	막대한 통일비용	전후재건 비용	저성장 악순환	-
사회·문화		-	사회통합문제	민족통합문제	사회혼란 가중	-

3.4. 독일·베트남·예멘 통일 사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용가능성

먼저, 한반도에서는 무력을 통한 정복 통일, 즉 베트남식 통일 모델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도 안된다. 지난 1950~1953년의 한국전쟁에서 남북한 양측 모두 큰 피해만 입었고, 불신과 적대관계를 구축하였을 뿐 통일을 이룰 수 없었다. 지금도 전쟁이 발생한다면 사정은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보아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제화될 가능성이 크며, 역시 승부가 결정 나지 않는 휴전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법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는다.

한반도에서는 독일 통일과 예멘 통일 중 어느 유형이 더욱 타당할까? 독일식 조기 흡수통일 모델이 한반도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북한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친문학적 통일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남

함에 없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어려울 것이며, 만약 흡수통일이 이루어지면 이는 수습할 수 없는 재난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이종오, 1995). 예멘식 합의통일 유형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예멘의 통일과 내전, 그리고 재통일로 연결되는 일련의 사태로 살펴보았듯이, 합의통일은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끌 뿐이지 통일 그 자체로서 무력대결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 후 내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언제나 잠재한다(서재만, 1994). 하지만, 독일식 흡수통일은 통일 후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완전한 합의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극소화하기 위한 치밀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요청된다.

4. 한반도 통일논의

4.1.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앞의 <그림 2>는 분단 양국의 세력관계와 통일방법, 통일체제와 소요기간을 축으로 한 통일의 유형론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적절히 나타내 주고 있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북한 정부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포괄한다.

먼저, 한국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체제수렴적 흡수통일 방안으로 이해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세력관계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 남한 체제로의 흡수통합을 목표로 하되, 장기간에 걸친 평화적 공존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평화·민주의 원칙 하에 ‘1민족 2국가 2체제’가 유지되는 화해·협력단계(제1단계)로부터 출발하여, ‘대외적 측면에서 국제법적 주권 국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는 과도기적인 남북연합단계(제2단계)를 거쳐,³⁵⁾ ‘1민족 1체제’를 가진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제3단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체제공존적 합의통일 방안의 일종이다. 이는 남북한의 체제가 세력 균형을 바탕으로 각각 유지되는 가운데, 양 체제의 공존을 전제로 합의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데 반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 원칙’ 위주로 모든 문제를 조속히 일괄 타결하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형태상으로는 ‘1민족 1국가 2체제’,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각각 유지한 채 연방제로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이 두 방안의 간격은 매우 크다. 세력관계의 불균형을 전제로 한 점진적 흡수통일이 남한의 방침이라면, 북한의 방침은 세력관계의 균형을 전제로 한 일괄 합의통일을 모색하는 것이다. 양 체제의 통합이라는 면에서, 남한은 자본주의로의

35) 한국 정부는 남북연합이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일반적 의미의 ‘국가연합’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수렴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을 강조한다. 통일 국가의 형태 면에서, 남한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건설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지만,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국가 건설을 표방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은 일치되고 있다. 이러한 일치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³⁶⁾

4.2. 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식의 괴리는 좁혀질 수 없는 것인가? <그림 2>에 따르면, 이 둘의 중간에서 성립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발견된다. 하나는 ‘체제공존적 흡수통일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수렴적 합의통일방안’이다.³⁷⁾ 체제공존적 흡수통일방안은 세력이 강한 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되,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과 대만을 조속히 흡수하여 ‘1국가 2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국가통일을 이루되, 체제의 통일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³⁸⁾ 이 방안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 이유로는 한반도에서는 중국과 대만과는 달리 세력관계의 압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로 지적된다(이상문, 1994). 중국과 대만은 영토나 인구 비가 약 100 : 1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나, 남한과 북한은 영토가 비슷하고 인구 비는 2 : 1 정도이다.³⁹⁾ 즉 현재로서는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흡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체제수렴적 합의통일방안은 체제의 융합적 수렴을 이루어 체제통일을 달성한 후 합의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쌍방이 각각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전제로 양체제가 접근·수렴하여, 합의통일을 이루려는 방안이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국가통일’을 이루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체제는 병립하는 구조를 상정하는 데 반해, 이 방안은 ‘체제통일’을 먼저 이룬 다음, 세력균형을 전제로한 합의의 형태로 ‘국가통일’을

36) 이상문(1994)은 남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의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국가 형태를 갖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의 절충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러나 남한은 이 상태를 과도기로 설정하지만, 북한은 중착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 괴리는 매우 크다.

37) 이 두 가지 이외에도 독일형 통일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것은 통일과정에서 중간단계의 설정과 같은 단계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능한 한 조속히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여 흡수통합하려는 방안이다. 한국내 ‘대북한 강경론’의 주장이 이러한데,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반대하고 북한봉쇄정책을 통하여 북한을 단기간 내에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이 조기에 북한을 흡수통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8) 덩소평(鄧小平)은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하는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이상문, 1994 재인용). “조국 통일 후 대만특별행정부는 자체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대륙과 다른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1983년 6월); “통일 후 대만은 계속 자본주의를 실행하고 대륙은 사회주의를 실행한다. 그러나 하나의 통일된 중국이다. 한 개 중국, 두 가지 제도이다”(1984년 2월).

39) 이상문(1994)은 중국과 한반도 상황의 차이점으로, 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다. ①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중국정부와 대만정부의 쌍무회담으로 가능하지만, 남북한 통일은 제3자가 개입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②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나서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은 각각 병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③ 중국은 대만을 중앙인민정부에 직속되는 특별행정구로 할 수 있지만, 남한과 북한은 두 개의 정부가 병존하므로 앞으로 통일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는 체제수렴을 상징하는 데서는 유사하나,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냐 흡수에 의한 것이냐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즉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남한의 체제, 즉 자본주의로의 수렴을 의도하고 있는 데 반해, 이 방안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체제의 창출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차원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기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남한 자본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를 추구하고(Peacock and Willgerodt, 1989a, 1989b; Schlecht, 1990), 북한 사회주의는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를 추진하여(Elster and Moene, 1989), 체제의 이질성을 없애면서 융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융합한 새로운 체제로의 통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리의 요체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발전격차를 축소하여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발전격차의 축소는 양국간 세력관계의 불균형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야만 세력관계의 균형을 기초로 합의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세력관계의 균형은 통일에 반대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의 경제적 의존을 체제통일을 통해서 강화하여야 한다. 서로가 분리되어서는 생존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일이야말로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게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북한 내부의 통일 분위기 조성만으로 통일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한반도가 분단된 가장 큰 이유는 주변 강대국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논리 때문이었다. 한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와 양해가 필수적이다. 통일을 주도한 서독과 북베트남, 그리고 북예멘은 오히려 자국에 대한 강대국간 또는 지역강국간 경쟁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고 유리한 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남북한도 마찬가지로 과제를 떠맡고 있다. 남북한 모두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동서 화해의 증대, 사회주의권의 개방과 개혁, 세계경제의 전지구화와 지역화 추세,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등장 등 국제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망된다.

1990년 독일 통일을 위하여, 서독 정부는 러시아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금을 지불하였고, 프랑스가 안심할 수 있도록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은 마찬가지로 사명을 떠맡아야 한다. 러시아에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에 직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서 유기적 관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 한국은 새롭게 탄생하는 막강한 적대세력이나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동반자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탈냉전·전지구화 추세는 한국이 이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결론: 결손국가론의 정립

‘나’의 동심원이 ‘가문’의 영역을 초월하지 못하고 신분제 때문에 백성이 국가의 존재가치를 절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발 먼저 근대화의 기법을 익힌 일제에게 삶의 터를 빼앗기고 방황해야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망국과 피점령의 체험은 죽을 민족화하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고(정창열, 1982: 5~32), 백성은 비로소 무지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나라’라는 것을 상상할 겨를” 조차 없었던 자에게 일제의 강점과 수탈 및 착취는 “겨레라고 하는 보다 큰 세계”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 즉 “나를 초월하는 나라의 존재가 내 복(福)의 대전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것이었다(최정호, 1989: 40~41). 그것은 혁명이었다. 내부 분열상태에 놓였던 죽은 이 때부터 민족의 형상을 띠기 시작하였고 체험을 통해 익힌 민족의 관념은 좌와 우의 다양한 근대적 정치사상과 맞물리면서 치열한 반외세 항쟁의 뇌관을 발화하였다. 게다가 이미 ‘중세’ 때 그어져 전해 내려온 죽의 보다 단순한 지역 경계 덕분에 민족은 즉각 국가와 조우할 수 있었다. 다른 주변부의 경우와 달리 민족관념의 확산이 종족갈등과 분리주의로 타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내부 갈등의 불씨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국가경계의 정당성에 일격을 가하면서 회복주의를 배태할 ‘이산가족’의 문제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사이에 부채하다시피 하였지만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만한 민족 내부의 모순은 동북아시아에 산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동서냉전 체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 예멘 등과 동아시아의 베트남, 한국, 중국 등이 민족분단의 비극을 맞았고 그밖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이 민족모순의 깊은 갈등에 빠져 버렸다. 그러나 한반도는 주권을 달리하면서 치열한 체제논쟁을 벌였지만 상대방이 동일한 핏줄의 동포라는 사실에 결코 이론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 내의 동과 서는 분단의 부자연성을 역설하고 통일에 목말라 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는 상충하는 민족사상(像)을 정립하면서 동질성을 파괴하는 데 남다른 재주를 보였지만 죽의 세계의 단일성을 부정할 수 없었고 과거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지워 버릴 수 없었다. 앤더슨(Anderson, 1991)이 말한 ‘상상해 낸 공동체’로서의 민족이 역사 속에 실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단은 ‘1민족 2국가’의 체제 모순을 배태할 뿐 ‘2민족 2국가’라는 민족 자체의 해체와 재형성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1. 통일 민족국가 건설의 과제

이제 다가온 탈냉전의 상황은 한국의 민족통일이라는 문제를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만들어 내고 있다. 즉 냉전체제의 규정에 구속되어 있었던 이전에 비하여 민족내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국제적 조건이 작용하는 방식도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보다 현실주의적인 차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냉전체제의 해체에 이어 전개되고 있는 전지구화의 진전은 남북한이 세계체제와 맺는 관계를 완전히 비대칭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가는 반면, 남한은 세계체제에 더욱 깊숙이 참여하여 전지구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민족주의의 내용상 불일치는 확대되고 있다(박명규, 1994).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극도로 강화하고 있고, 남한에

서는 국수적 민족주의의 태동과 아울러 세계시민 의식이 태동하고 있는 현상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앞에서 살펴본 독일·베트남·예멘·한국·중국 모두에서 분단국가 체제 극복의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지금도 제공하고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분단국가로 존재하는 남북한의 민족주의를 점검하여 새롭게 창출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 전통문화의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복고적 민족주의이어서는 곤란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진취적 민족주의이어야 한다. 또 “우리 겨레, 우리 나라, 우리 것, ……”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거부를 일삼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의 다른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견지하여야 한다. 또 그간 이룬 경제성장에 자족하여 다른 민족을 착취하려는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시켜야 한다. 이러한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민족주의를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이 두 개의 분단국가를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들 수 있는 접착제는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이다.

국가는 민족의 운반 수단이다.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민족의 내재적 의지는 국가를 통하여 비로소 결집되고 활성화된다. 바로 이 국가라는 존재양식을 통하여 한 민족은 국제 정치질서의 혼잡한 교통망 속에서 주체적 단위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결집된 민족 역량을 구체적인 기관과 장치들을 통하여 내적·외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존재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민족국가의 건설을 시도한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의 의지는 민족주의를 통하여 표출된다. 민족국가는 민족구성원을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결집시키는 접착제이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지향점이 일치할 때,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폭력장치로서의 국가가 ‘실질적인’ 민족의지를 대변하고 관철시킴으로써 국가와 민족간의 괴리가 극소화되거나 제거될 수 있을 때, 그 민족의 단합과 총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박호성, 1994: 224).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째 교훈은 무력통일은 어떤 경우에도 회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분단국의 세력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경우는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세력관계가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는 한쪽에 의한 다른 한쪽의 정복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피하여야 할 방법이다. 따라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살펴볼 점이 있다. 그것은 두 국가간의 세력관계이다.

세력관계의 극심한 불균형은 흡수통일을 낳았다. 독일의 사례가 그러하다. 독일에서는 경제적 발전격차가 엄청났기 때문에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도 계속된다. 세력관계가 비슷할 경우 두 체제는 경쟁한다. 그러나 경쟁하지 않고 통일을 이룬 사례가 있다. 1990년의 예멘 통일이 그것이다. 예멘에서는 북예멘이 남예멘을 실질적으로 흡수하였지만, 통일 국가가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는 난관을 겪었다. 게다가 걸프전을 계기로 악화된 경제적 사정은 이러한 갈등을 폭발시켰다. 불완전한 통합은 재분단을 낳았고, 1994년 내전을 거쳐 무력으로 재통일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통일 방법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독일이 겪고 있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예멘이 겪었던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결손민족국가 체제를 온전한 통일 민족국가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민족통합도 중

요하지만 한층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을 결집시킬 구심적 이념을 찾아내야,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2. 가족주의적 민족관념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민족’의 관념은 근대화의 충격 속에 몰아닥친 삶의 혼동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리이다. 즉 근대화의 산물이자 그 추동력이라는 것이다. 민족의 관념은 특정한 신분 출신의 ‘선민’(選民)보다 인민 전체의 동의와 참여에서 정당성을 발견하는 근대적 평등사상 위에서 생성되었다. 이것을 한국 정치상황의 변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보다 치밀하게 살펴보면 평등사상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이미 오래 전부터 내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구사하는 민족이라는 말은 서양 문화가 침투한 한말에서나 겨우 쓰이기 시작한 단어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랑스 대혁명에서 태동한 내이션(nation)이라는 단어를 일본인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본식 조어(造語)의 하나이다. 따라서 민족과 내이션이라는 단어를 구사할 때 한국인과 영국인이 동일한 관념을 떠올리면서 말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단어 안에 배어 있는 본래의 사상적 의미를 적확히 담아 내는 조어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번역어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동양과 서양 사이에 존재하는 의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보이기 시작한다. 공통성은 진보성이다. 내이션이라는 단어를 발명한 서유럽에서나 민족이라는 조어를 개발한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나 어디서고 이 한마디 말에는 자결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진보적인 인간상(像)이 담겨 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누가 시민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견해는 나라마다 상당히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대로, 현재 영미권에서 내이션의 개념은 단순한 인종이나 종족 관념의 포로가 아니다. 오히려 내이션에의 귀속은 피부색과 이목구비의 형태보다는 출생의 우연과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시민권은 ‘밖’의 사람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와 의무인 동시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권리와 책임인 것이다. 민족의 관념이 이처럼 보다 ‘개방적’일 수 있었던 것은 역사발전의 독특한 수순 덕분이었다(Kohn, 1967: Chapter 5). 주변부보다 서너 세기 먼저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중앙 국가 기구의 권력을 강화한 선발 국가로서의 위치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근대라는 민족자결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즉 소수 족의 품속에 배타적인 자의식이 자라나기 이전에 다수 족은 이미 서너 세기에 걸쳐 신분 상승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통의 신화와 상징을 생산해 내면서 족의 범주를 넘어서는 보다 넓고 열린 내이션의 의식을 키워 갈 수 있었다는 말이다. 소수 족은 근대 이전에 이미 다수 족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고 ‘상층’의 신화와 상징 속에서 자아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다수 족은 시민권을 출생과 선택의 문제로 해석하는 기존 관념의 월등한 동화력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민의 문을 약간 열린 상태로 남겨 놓았고 족의 차원을 넘어서는 내이션의 관념을 재생산시켜 갔다.

한국의 경우는 달랐다. 우리는 근대 이전에 이미 역사 속에 존재한 단일 족에 한정시

켜 시민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가의 지역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태고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족의 신화와 상징을 통해 민족을 상상하였다.⁴⁰⁾ 반면에 영미권은 전(前)근대적 사회공동체인 족과 내이션을 동일시하지 않았고 전자를 후자의 대전제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혁명을 일으켜 근대의 절대개인상(像)을 개발해 내고 시민사회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시민혁명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이미 마친 서유럽의 선발 국가로부터 피져나오는 ‘주권’의 관념에 충격 받고 고무되어 근대화에 나선 국가라면 어디서고 나타나는 현상이 내이션의 ‘종족화’였다(Smith, 1981, 1986). 선발 국가를 추격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독일의 정복형 문화적 민족관념이 그러하였고 제국주의의 수탈을 이겨내야만 하였던 제3세계 식민지의 저항 민족관념 역시 그러하였다. 불평등과 착취에 시달리고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식민지의 원주민에게 인간 해방의 출발점은 시민이라는 민주적 개체의식의 함양보다는 족이라는 전체의 해방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그러한 후발 국가의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특수한 역사적 조건 때문에 종족 관념의 위력이 더욱 크고 사고의 전체지향성이 더욱 강렬하다. 하나는 가족을 인간의 조화로운 결사의 모형으로 간주하고 거기서의 권위관계로부터 국가권력을 유추해 내는 성리학(性理學)의 전통이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국가는 가족을 확대시킨 모형으로서 존재하고 민족은 한 어머니의 소생이라는 ‘동포’나 같은 핏줄의 사람이라는 ‘겨레’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다(노태돈, 1992: 18~19). 그러한 혈연의식은 당연히 한국 사회에 강렬한 구심력을 불어넣고 사고의 전체지향성을 더욱 강화한다.

게다가 한국은 혈연의 전설과 신화가 진실처럼 느껴질 만큼 오랜 기간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단위체로 존재해 온 나라이다. 유럽이 중세의 ‘암흑 시대’에 놓인 채 분열과 전쟁을 반복할 때 한국인은 이미 수백년 동안 국가를 구성해 온 경험을 간직하고 있었다. 상당한 수축과 팽창의 가능성을 보였던 정치공동체의 지역 경계는 통일 신라 때부터 만주 이남의 작은 공간으로 축소되었고 이러한 역사의 결정에 저항하려 한 보다 진취적인 천하관은 발해가 멸망하고 고려 조정에서의 사대파가 승리함으로써 그 설 땅을 잃고 말았다(임현진 외, 1994: 487~511). 서양의 시간대로 말한다면 한국은 이미 ‘중세’에 ‘근대’의 지역적 경계를 갖추었던 나라였다. 그리고 그러한 안정적인 생활 공간 속에서 혈연을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단순한 은유(metaphor)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물학적 관계로 상상하는 관념이 생겨났다.

반면에 사회에 강렬한 구심력을 불어넣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념으로서의 혈연적 민족관념을 계속 지탱하고 강화해 주는 것은 해방 이후의 민족 분단이었다(김동성, 1989: 7~37). 역설적이지만 좌절과 실패에서 민족주의의 ‘마력’이 생겨나고 강화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본래 민족주의는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 대안을 제공하는 이념으로서의 대단히 빈약한 신념체계이다. 민족주의가 주권이나 외쳐 대는 막연

40) 탈냉전의 시대에 보스니아 사태를 목격하고서야 ‘에쓰닉 내셔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말을 고안하는 영미권으로는 신기한 현상이다(Connor, 1973: 1~21). 그러나 그러한 반응은 자기 역사의 잣대로 남을 재 보려는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에쓰닉 내셔널리즘을 다시 한국말로 직역하면 ‘족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되어 버린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 발상이다.

한 감상적인 정치 선동에 그쳐 버리지 않으려면 존재를 초월하려는 특수한 성격의 종교나 맘시즘 같은 다른 이념체계로부터 조직과 이론 및 투쟁 전략을 수혈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주의에게는 그러한 동반자가 부재하였다. 인간의 영(靈)의 세계를 육(肉)에 종속시키고 현존 사회질서에 대한 부정과 비판을 단념하는 전통적 기복신앙(샤머니즘: shamanism)과의 부단한 신크리티즘(syncretism: 諸說混合) 과정을 이미 거친 탓에 한국의 불교와 기독교는 종파를 불문하고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상태였다. 반면에 맘시즘의 언어는 한국전쟁의 충격과 상처 때문에 사회과학의 학문 세계에서 마저 내쫓기고 만 신세였다(김병국, 1994; 손호철, 1991).

그런데 한국의 민족주의는 여전히 대중을 동원할 힘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의 민족관념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구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혼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생산해 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이론’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은 아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교나 맘시즘 같은 다른 이념체계로부터 대중을 열광시킬 힘을 얻어내기보다는 분단이라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정치의 담론 영역을 장악하고 운동 공간을 지배할 기회를 포착하였다(변형운 외, 1985: 11~64, 317~394). 한국의 남과 북은 주권을 달리하면서 치열한 체제 논쟁을 벌였지만 상대가 동일한 핏줄의 동포라는 신화에 이론(異論)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분단의 부자연성을 역설하고 통일에 목말라 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는 상충하는 민족사를 정립하면서 동질성을 파괴하는 데 남다른 재주를 보였지만 족의 세계의 단일성을 부정할 수도 없었고 과거 역사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지워 버릴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자아에 대한 추상화의 사다리를 올라 상단에 섰을 때 강렬히 다가오는 민족의 관념에는 동양의 전통문화와 서양의 근대사상이 혼재해 있었고 분단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현재의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같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양면성 덕택에 민족은 진보적 운동가에게나 보수 정객에게나 자기 정당화를 위한 최상의 수단이 되는 것이었다. 즉 한국인이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전근대적 족의 관념과 혈연의 수사학으로 내이션이 그려졌기 때문에 민족은 정치학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서양의 낯선 개념으로 그쳐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안’과 ‘밖’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냉전이라는 이념적 대결의 치열함에 비례하여 군비지출이 늘어나고 국가권력의 폭력성이 강화되는 상황하에서 분단의 문제에 초연할 수 있는 한국인은 없었다. 오히려 민족은 일상적 삶의 문제였고 조국 통일은 근원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보수에게 분단은 자원을 낭비하고 선진화를 지체시키는 소모전의 모태이자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냉전의 상징이었던 반면에 진보에게는 분단이 이념적 지형의 좌측 공간을 축소시키고 독재의 빌미를 제공하는 족쇄처럼 보였던 것이다(이호재 외, 1989: 105~107, 115~123; 송대성, 1989: 77~85).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민족을 최상의 가치로 올려놓았다.

한국인은 전통과 근대의 문화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근대로의 여행을 한국 보다 서너 세기 먼저 시작한 서양 사회로부터 새로운 개념과 사상을 가져다 ‘한국식’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색다른 근대를 개척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낯선 문화와 만날 때 언제나 자기식 대로 상대를 재해석하면서 대화를 가능케 할 ‘주파수’를 찾는다. 그러나 애초에 대중의 의식이 다르고 과거 역사의 발전경로가 상이한 탓에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전달해 줄 채널은 일반인의 손에 잘 닿지 않는다. 사상의 세계에서 절대 개인의 관념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기 전에 제국주의에

밀려 역지로 근대의 시대가 시작된 한국에서의 민족관념처럼 개념의 상황조건적 변형은 필연적이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형식적 이성을 구현한다는 의식에서라기 보다는 제국주의의 시대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생각해 낸 민족관념은 족과 혈연의 의식으로 무장된 복고적이고 낭만적인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였다.

3. 가족중심적 민족관념을 넘어서

그렇다고 가족주의적 민족관념이 다양한 주의·주장과 조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가족주의는 다른 문화적 현상처럼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다. 시대가 달라지면 가족 내에서 부권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변하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라는 전통적 덕에 대한 민중의 이해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전에는 부(父)의 책임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가장의 핵심 역할이 되고, 전통사회에서는 부의 당연한 권리였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가족구성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는 조건부의 권리가 되어 버릴 수 있다. 게다가 성리학에서의 부권은 자애적이고 온정적인 것이다. 무엇이 자애적이고 온정적인가를 판단하려 할 때 가슴속에 품어 보는 평가의 기준은 근대화의 충격 속에서 계속 높아지는 반면에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민중의 반발 심리는 더욱 더 강렬해진다. 가족주의가 양(兩)날을 가진 정당화의 논리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문화의 변화 때문이다. 국가와 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가족적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서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이상향에서 현실이 멀어질 때에는 정당화의 논리가 오히려 저항의 당위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위민(爲民)의식은 서유럽의 근대사에 등장하는 국민주권의 관념과는 다른 맥락에서 나온 온정적인 개념이다. 자연상태와 사회계약 등의 설화를 지어낸 서유럽의 근대적 정치사상 내에서 개인은 절대성과 주권성을 가진다.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익을 쟁길 줄 아는 존재라는 말이다. 한국적 정서에는 그러한 절대 개인의 상(像)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의(民意)가 사회공동체와 관련한 철학적 논의에서 부차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군주와 가장은 덕을 갖추고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전력하여야 한다. 가족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양의 시민처럼 국가에 대하여 일련의 불가침한 자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다. 유학의 설화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오히려 군주와 천(天)이다. 전자는 후자에게 백성의 삶을 보살필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사회를 다스릴 수 있는 천명을 얻는다. 군주가 약속자라면 천은 수약자이고 민은 계약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권리는 천이 가지고 책임은 군주가 지는 반면에 혜택은 민의 몫인 독특한 삼각관계가 상징되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의 위민은 서유럽의 진보적 관념처럼 인간해방 등의 추상적 가치를 구현하려 하기 보다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인간사회의 화목을 조성하고 의식주를 개선하려 하는, 말하자면 철저히 실생활 중심의 사상이다. 논리의 출발점과 구체적 전개방식은 서구적이지만 그 귀결점은 서유럽의 담론 체계 못지 않게 민을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보는 이에 따라 실천적 의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탄력적이고 동태적인 개념이다. 성리학이라는 형이상학적 관념체계가 인본주의와 기복신앙이라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강력한 제약을 가하던 조선에서조차 위민 정치는 탄력성을 가졌다. 정조(正

祖)가 펼친 정치가 이를 잘 보여주었다. 이만수는 정조의 애민(愛民)을 시지여상(視之如傷)이라고 불렀고, 이태진(1983: 75)은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라는 문장에서 그의 계몽적 성향을 발견하였다. 시지여상은 늘 백성이 다칠까 걱정하면서 다스린다는 의미이고, 만천명월주인옹은 수많은 천수(川水) 위에 하나씩 담겨 비치는 밝은 달처럼 군주(달)는 자신의 신민(물) 하나하나를 밝혀주고 바른 길로 안내한다는 군민(君民) 일체의 정치철학이다.⁴¹⁾

따라서 한국적 위민의 관념은 상당한 수준의 탄력성과 동태성을 가지는 것이다. 서세동점의 근대사가 펼쳐지기 이전의 '정체'되어 버린 교조적인 조선의 현실 정치에서 조차 무엇이 위민인가는 언제나 논쟁 거리였고 이에 대한 하나의 불변하는 정통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았다. 정조의 정치는 그러한 유교적 세계관의 탄력성과 동태성을 보여준다. 근대의 서유럽에서 과학적 이성이 다양한 자연 권리를 상정하고 상충하는 이상향을 정당화시켰던 것처럼 조선 군주의 수신(修身)과 극기(克己) 및 훈련(訓練) 역시 상이한 군주와 민의 관계를 낳고 위민 정치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정조는 현대의 한국인이 천성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해 온 유교의 세계 내에서조차 노비제의 폐지라는 상당히 '진보적'인 발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한 문화의 탄력성과 동태성은 이질적 서양 문명에 노출되고 형식적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교과서적으로 배워 나가는 현대의 한국에 와서 더욱 더 강렬해진다. 위민에 대한 해석에 일련의 제약을 가하고 정치적 담론을 제한해 온 철학체계로서의 성리학이 무너지고 인본주의적 문화로서의 유교가 좌절과 시련의 근대사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분단 시대에 있어서, 가족중심적 한국 민족주의는 서유럽의 시민사회적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민족 결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한국의 혈연적·가족적 민족주의는 위민이라는 전통적 관념 덕분에 다양한 주의·주장을 낼 수 있었다. 그러한 이질적인 '소리'에 구태여 이름을 붙인다면 한국식 보수와 한국식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은 서유럽 사회계약론의 기저에 깔린 '절대 개인'(absolute individual)의 독특한 존재론과 현대 과학의 경험론적 인식론에 설복당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러한 철학적 논의의 결과 물인 선거 정치와 시장체제를 위민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자기 나름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즉 국가 대(對) 시

41) 이태진(1993)에 의하면 정조의 군주론은 새로운 것이었다. 정조 이전에는 물이 백성이고 배가 군주라면 재상이 사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그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 발전시켜 군민 일체성을 주장하였고 파봉당(破朋黨)의 주장을 펼쳤다. 신하의 역할이 강조되는 봉당론을 부정한 것이었다. 이어 수많은 천수에 하나씩 담겨 비치는 달처럼 신하라는 중간의 기생적인 매개자를 생략한 채 백성의 삶을 어루만져 주려 하였다(이태진, 1993: 77). 이러한 정치적 신념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한다. 정조는 역대 왕과 왕비의 능원을 수시로 참배하고 상언제(上言制)를 대폭 활성화시켜 민과의 만남을 확대하고 민정을 살피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규장각(奎章閣)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장용영(壯勇營)을 창설하여 역대 훈신가문 출신의 교목세가(喬木世家)에 의한 봉당정치를 타파할 기반을 다졌다. 이어 그 위에서 민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물 감축과 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자휼전칙(字恤典則)의 시행 및 부당한 형벌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이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 결과였다. 그러나 위민 의식의 절정은 역시 노비제를 혁파하려던 정조의 구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태진에 의하면 정조는 “천하의 억울함 중 노비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당대에 그치는 특수한 고용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개혁에 착수하였다고 한다(이태진, 1993: 78~82).

장의 대결을 상징하는 서유럽의 사상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현세적 인본주의의 전통문화에서부터 실생활 중심의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언어를 찾아내 구사하는 것이다.⁴²⁾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 한 세기 이상 흩어지고 찢어진 우리의 민족을 달래고 추스를 수 있는 공통의 언어, 공통의 이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이것을 기초로 우리의 조상들이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황금의 시대를 구가하던 이 땅위에 명실공히 통일된 근대적 민족국가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만길. 1978.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 1985.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전개,” 『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 1990. “한반도 중립화 안과 평화,” 『통일시대 역사인식』, 청사.
 강만길·신용하·정창렬. 1984. “한국근현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신동아》, 9월호.
 강만길·서중석·이병천·임영태. 1988. “한국근현대사의 성격과 민족운동,” 《창작과 비평》, 제60호.
 강재언. 1983. 『근대 한국사상사 연구』, 미래사.
 김경창. 1982. 『동양의교사』, 집문당.
 김국신·김도태·여인곤·황병덕. 1994a.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1: 독일·베트남·예멘의 통일사례연구』, 한울.
 ———. 1994b.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2: 독일·베트남·예멘의 통일사례연구』, 한울.
 김도형. 1986. “한말 계몽운동의 정치론 연구,” 《한국사 연구》, 제54호.
 ———. 1988. “대한제국 말기의 국권 회복 운동과 그 사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989. “한국 근대 재야 지배 세력의 민족문제 인식과 대응,” 《역사와 현실》, 제1호.
 김동성. 1989. “한국 지식인과 대학생의 민족주의 의식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23권 제1호.
 김병국. 1994. “무정형의 시민사회와 정당정치의 붕당성: 분단시대의 정신적 상황에 관하여,” 《사상》, 제21호.
 김성보. 1992. “북한의 민족주의 세력과 민족 통일전선 운동: 조선민주당을 중심으로,” 《역

42) 이 때 양자를 갈라 버리는 결정적 문제는 부(富)의 문제였다. 부는 전통 문화에서 지배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예기』(禮記) 속에 그려진 조선 시대에서의 이상형은 고아와 장애자와 병자 등의 약자가 보호되고 절제의 미덕이 강자의 치부 심리를 억제하는 대동(大同) 사회였다. 이러한 부에 대한 불신은 현대 한국에서 서유럽의 사회과학과 만나 새로운 활력을 얻고 한국식 보수와 진보의 경쟁 구조를 낳았다. 즉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너무나 자명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 ‘말’로 나타나지 않는 실생활 중심의 위민의식 위에서 각기 다른 현대적 사회과학 이론을 동원하여 논쟁을 벌이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 사비평》, 제16호.
- 김용섭. 1970. 『조선후기농업사연구』 I · II, 일조각.
- 김원룡. 1983. “한국 민족의 형성과 선사시대,” 『한국학 입문』, 학술원.
- 김유찬. 1993. 『독일 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 김정기. 1985. “청의 조선에 대한 군사정책과 종주권,” 『변태섭 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삼영사.
- 김정기. 1988a. “청의 조선 종주권문제와 내정간섭,” 《역사비평》, 제3호.
- . 1988b. “대원군의 납치와 반청의식의 형성,” 《한국사론》, 제19집.
- . 1990. “한말 자본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 연구,” 《역사비평》, 제11호.
- 김정배. 1973. “한국 민족과 예맥,” 『한국 민족문화의 기원』.
- 김정학. 1964. “한국 민족 형성사,” 『한국 문화사 대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학준. 1979.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해방 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 근대사연구회 편. 1987. 『한국 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 상·하, 한울.
- 노태돈. 1991a. “한국 민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대사 논총》, 제1집.
- . 1992a. “한국 민족 형성 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제19호.
- . 1992b. “해방 후 민족주의 사학론의 전개,” 노태돈 외, 『현대 한국사학과 사관』, 일조각.
- 노태돈 외. 1992. 『현대 한국사학과 사관』, 일조각.
- 박명규. 1991. “한국과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19세기 후반 정치변혁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 1994. “민족사회학: 국제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 문제,” 한국사회학회 편, 『21세기의 한국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 박명립 외. 1989. 『해방 전후사의 인식 6』, 한길사.
- 박병태. 1986. “한국 무문토기의 연구,” 《한국사학》, 제7집.
- 박성수. 1980.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 박양신. 1988.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조선 침략의 성격,” 《역사비평》, 제3호.
- 박찬승. 1987. “조선 후기 농민항쟁사 연구,” 근대사연구회 편, 『한국 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 (하)』, 한울.
- 박현재. 1987.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 문제,”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과 민중』, 두레.
- 박호성. 1992. “유럽 근대 민족형성에 관한 시론,” 《역사비평》, 제19호.
- . 1994. 『노동운동과 민족운동』, 역사비평사.
- 백낙청. 1994.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 변형윤 외. 1985. 『분단 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 브루네 외. 1994. 『헤이 오씨, 안녕 배시: 독일 학생들의 통일 소감집』, 푸른나무.
- 사계절편집부 편. 1984. 『한국 근대 경제사 연구』, 사계절.
- 서중석. 1991. 『한국 현대 민족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 . 1992. “해방후 남한의 우익 민족주의와 민족통일전선,” 《역사비평》, 제16호.
- 서재만. 1994. “예멘 통일과정이 한국에 미치는 시사점,” 『분단국의 통합과 재사회화』, 한국지역연구협의회.
- 손호철. 1991.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 국가·지배연합·이데올로기,” 손호철 외, 『한국 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송건호 외. 1979. 『해방 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 송건호·강만길 편. 1982. 『한국 민족주의론 I』, 창작과 비평사.
- 송대성. 1989.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 및 제약성,” 《국제 정치논총》, 제29집 제1호.
- 신기석. 1987. 『신고 동양외교사』, 탐구당.
- 신용하. 1984. “민족 형성의 이론,” 《한국사회학연구》, 제7집.
- . 1987a. 『한국 근대 사회사 연구』, 일지사.
- . 1987b.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용하 편. 1986. 『민족이론』, 문학과 지성사.
- 안병직·박성수 외. 1980. 『한국 근대 민족운동사』, 돌베개.
- 안병태. 1982. 『한국 근대 경제와 일본 제국주의』, 백산서당.
- 양상현 편. 1985. 『한국 근대 정치사 연구』, 사계절.
-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사. 1992. “한국민족은 언제 형성되었나,” 《역사비평》, 제19호.
- 유임수. 1994. “독일 재사회화의 평가 및 한반도에 미치는 시사점,” 『분단국의 통합과 재사회화』, 한국지역연구협의회.
- 윤영관. 1995. “세계화와 민족문제: 한국의 경우,” 『지방화·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교육 문제』, 서울대학교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
- 이광린. 1989. 『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 일조각.
- 이상문. 1994. “중국의 통일 모델: 1국가 2체제,” 『분단국의 통합과 재사회화』, 한국지역연구협의회.
- 이영호. 1989. “한국 근대 민족문제의 성격,” 《역사와 현실》, 제1호.
- 이영훈. 1980. “조선 후기 팔결작부제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 제29호.
- . 1985. “조선 후기 토지소유의 기본구조와 농민경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종석. 1994.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그 연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여름호.
- 이종오. 1993. “분단과 통일을 다시 생각하며,” 《창작과 비평》, 제21권 제2호.
- . 1995. “해방 50년의 근대화 그리고 통일에 관하여,” 《창작과 비평》, 제23권 제3호.
- 이창훈. 1988. “러시아의 극동 침략 정책과 조선,” 《역사비평》, 제3호.
- 이태진. 1993. “정조: 유학적 계몽 절대 군주,” 《한국사 시민강좌》.
- 이호재·오택섭·최상룡·안문석. 1989.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 법문사.
- 임지현. 1994. “한국사학계의 ‘민족’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제26호.
- 임현진·공유식·김병국. 1992. “왜 결손국가인가?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역사사회과학적 단상,”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인식』 발표 논문.
- . 1994. “한국에서의 민족형성과 국가건설: ‘결손국가론’ 서설,” 준봉 구범모 교수 화갑기념 논총 편집위원회, 『전환기 한국 정치학의 새지평』, 나남.
- 전경수. 1994. “베트남의 국가통일과 사회재편 과정,” 『분단국의 통합과 재사회화』, 한국지역연구협의회.

- 전경수·서병철. 1995. 『통일 사회의 재편 과정: 독일과 베트남』,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우용. 1992. “일제하 민족 자본가의 존재 양태와 민족주의,” 《역사비평》, 제16호.
- 정영훈. 1994. “근대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 ‘민족 있는 민족주의의 실패,’” 《정신문화연구》, 제17권 제2호.
- 정지용. 1995. “독일통일과 예멘통일,” 《민족현실》, 제1호.
- 정창렬. 1982a. “백성의식 평민의식 민중의식,” 변형운·송건호 편, 『역사와 인간』, 두레.
- . 1982b. “한말 변혁운동의 정치경제적 성격,” 『한국 민족주의론 I』, 창작과 비평사.
- . 1984. “조선 후기 농민봉기의 정치의식,” 『한국인의 생활의식과 민중예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 1989. “한국사(학)에서의 민중의식,” 『이영희 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두레.
- 조 광. 1980. “한국 근대 문화의 실학적 기초,” 『한국사학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조성윤. 1989. “한국 근대 민중의 민족문제 인식과 대응,” 《역사와 현실》, 제1호.
- 주독대사관 역. 1992. 『독일 통일 소사전』, 주독대사관.
- 주진오. 1985. “독립협회의 경제체제 개혁구상과 그 성격,” 『한국민족주의론 III』, 창작과 비평사.
- . 1988. “독립협회의 사회사상과 사회진화론,” 『손보기 박사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 . 1989. “한국 근대 집권·관료 세력의 민족문제 인식과 대응,” 《역사와 현실》, 제1호.
- 진덕규. 1976. 『한국의 민족주의』, 현대사상사.
- 천관우. 1973. “한국 민족주의의 구조,” 《신동아》, 9월호.
- 최덕수. 1994. “청일전쟁과 동아시아의 세력 변동,” 《역사비평》, 제26호.
- 최문형. 1979. 『열강의 동아시아 정책』, 일조각.
- . 1985. “제국주의 열강의 한국 침투와 그 영향,” 한국근대사연구회 편, 『한국 근대사회와 제국주의』, 삼지원.
- 최정호. 1989. “무사상의 사회,” 《사상》, 여름호.
- 한배호 외. 1992.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한우근. 1970. 『한국 개항기의 상업 연구』, 일조각.
- . 1971. 『동학란 기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Armstrong, John A. 1982. *Nations before Nationalism*,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Abdullah Sahar, Mohammad. 1994. “Yemeni Unification from Dream to Nightmare: Failure of the Elites’ Approach,” *Integration of Divided Nations and Resocialization*, Seoul: 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s.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Bass, Ernst B. 1986. “What is nationalism and why should we study 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3.
- Brass, Paul B. 1991. *Ethnicity and Nationalism*,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Breuilly, John. 1993. *Nationalism and the State*, 2n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ubaker, Rogers. 1994.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Soviet Union and Post-Soviet Eurasia: An Institutional Account," *Theory and Society*, Vol. 23, No. 1.
- Brune, Joachim, Herbert Flörchinger, Antje Helbing, und Annegret Pinther (Hrsg.). 1993. *Deutsch Stunden: Was Jugendliche von der Einheit denken*. Berlin: Argon Verlag.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 Burg, Steven L. 1993. "Nationalism Redux: Through the Glass of the Post-Communist States Darkly," *Current History*.
- Comaroff, John L., and Paul C. Stern. 1994. "New Perspective on Nationalism and War," *Theory and Society*, Vol. 23, No. 1.
- Connor, Walker. 1973. "The Politics of Ethnonationalism,"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7, No.2.
- . 1994. *Ethnonationalism: The Quest for Understand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eutsch, Karl W. 1966.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New York: MIT Press.
- Elster, Jon, and Karl Ove Moene (eds.). 1989. *Alternatives to Capi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irbank, John K., Edwin O. Reischauer, and Albert M. Craig. 1973. *East Asia: Traditions and Transforma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Gellar, Sheldon. 1973. "State-Building and Nation-Building in West Africa," S. N. Eisenstadt and Stein Rokkan (eds.), *Building States and Nation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Gellner, Ernest. 1964.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Gerschenkron, Alexander.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nthony. 1985.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Volume Two, London: Polity Press.
- Herbst, Jeffrey. 1989.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national boundaries in Afr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3, No. 4.
- Hobsbawm, E. J.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ugh, Jerry F., and Merle Fainsod. 1979.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roch, Miroslav. 1993. "From National Movement to the Fully-formed Nation: The Nation-Building Process in Europe," *New Left Review*, No. 198.
- Huntington, Samuel P., and Jorge I. Domínguez. 1975. "Political Development," in

-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Macropolitical Theory*,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Iriye, Akira. 1967. *Across the Pacific: An Inner History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New York: A Harvest/HBJ Book.
- Jakson, Robert H., and Rosberg, Carl G. 1982. "Why Africa's Weak States Persist: The Empirical and the Juridical in Statehood," *World Politics*, Vol. 35, No. 1.
- Jalali, Rita, and Seymour Martin Lipset. 1993. "Racial and Ethnic Conflicts: A Global Perspective," in Demetrios Caraley, and Cerentha Harris (eds.), *New World Politics: Power, Ethnicity and Democracy*, New York: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 Kamenka, Eugene. 1993. "Nationalism: Ambiguous Legacies and Contingent Futures," *Political Studies*, No. 41.
- Kedourie, Elie. 1993. *Nationalism*, 4th ed.,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Kodmani-Darwish, Bassma. 1991/92.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Forces of Nationalism and Fundamentalism," *Adelphi Paper*, No. 266.
- Kohn, Hans. 1967. *The Idea of Nationalism*, New York: Collier-Macmillan.
- Lijphart, Arend. 1977. *Democracy in Plural Societies: A Comparative Explo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yall, James. 1992.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ter the Cold War," *Survival*, Vol. 34.
- Mcneil, Willian H. 1990. *Polyethnicity and National Unity in World Histo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Narin, Tom. 1977. *The Break-up of Britain: Crisis and Neo-Naturalism*, 2nd ed., London: New Left Books.
- Naumkin, Vitaly. 1991/92.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Forces of Nationalism and Fundamentalism," *Adelphi Paper*, No. 266.
- Newman, Saul. 1991. "Does Modernization Breed Ethnic Political Conflict?" *World Politics*, Vol. 43, No. 3.
- Nimni, Ephraim. 1985. "Great Historical Failure: Marxist Theories of Nationalism," *Capital and Class*, No. 25.
- Nordlinger, Eric A. 1968. "Political Development: Time Sequences and Rates of Change," *World Politics*, Vol. 20.
- Ohmae, Kenichi. 1990. *The Borderless World: Power and Strategy in the Interlinked Economy*, New York: Haper Collins.
- Palmer, Robert R. 1971. *The World of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Harper Torch Books.
- Peacock, Alan, and Hans Willgerodt (eds.). 1989a. *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Origins and Evolu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 1989b. *Germany Neo-Liberals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London: Macmillan.
- Poggi, Gianfranco. 1978.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A Sociological*

- Introduc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Richmond, Anthony. 1984. "Ethnic Nationalism and Postindustri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7, No. 1.
- Roeder, Philip G. 1991. "Soviet Federalism and Ethnic Mobilization," *World Politics*, Vol. 43, No. 2.
- Rustow, Dankwart W. 1967. *A World of Nations*,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e.
- Schlecht, Otto. 1990. *Grundlagen und Perspektiv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 Seton-Watson, Hugh. 1977. *Nations and States*, Boulder, CO: Westview Press.
- Smith, Anthony D. 1979. *Nation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 1981. *The Ethnic Reviv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1986.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 1989. "The Origins of Na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2, No. 3.
- . 1993. "The Ethnic Sources of Nationalism," *Survival*, Vol. 35, No. 1.
- . 1994. "The Problem of National Identity: Ancient, Medieval and Moder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7, No. 3.
- Stalin, Joseph. 1942.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London: Martin Lawrence.
- Suh, Dae-Sook. 1994. "Integration of Divided Nations and Resocialization: Keynote Address," *Integration of Divided Nations and Resocialization*, Seoul: 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s.
- Tilly, Charles. 1975. *The Formation of Nation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1985.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en Berghe, Pierre L. 1967. *Race and Racism*, New York: John Wiley.
- . 1978. "Race and Ethnic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 No. 4.
-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Modern World System: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 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 . 1992. "Liberalism and the Legitimation of Nation States: An Historical Interpretation," *Social Justice*, Vol. 19, No. 1.
- Weber, Max. 1948.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trans. and e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Young, Crawford. 1982. "Patterns of Social Conflict: State, Class, and Ethnicity," *Daedalus*, No. 111. ㉔